

第28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2009年4月10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3항에 따라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사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2002년부터 6년까지 4년의

단기간 내에 청계천을 열어서 그야말로 국민적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계천을 덮은 사람은 누구냐? 63년부터 77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덮었습니다.

그 당시 청계천을 덮고 삼일고가도로를 설치할 때 서울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느냐? 도대체 누가 저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고 벌레가 끓는 청계천을 덮느냐?

그때는 박정희가 영웅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덮어서 영웅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열어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시대정신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복원, 살리기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사업을 들고 나왔을 때는 땅을 굴착하고 터널을 뚫는 사업이니까 환경파괴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국민적 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환경이라는 이데올로기, 환경이라는 시대정신을 입힘으로써 힘을 받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차관께서 나오셨군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행안부차관입니다.

○주성영 의원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위가 주도를 하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안이 현재 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방안은 아직까지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성영 의원 제가 찾아봤더니 우선 이게 대통령 선거공약에는 없던 문제입니다. 없던 문제인데 작년 10월에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등장했어.

대통령께서는 당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2년, 지방선거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세부 방침이 발표됐는데 보면 임기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현재 구체적으로 시한까지 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국민들 전체가 필요성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작년 10월 21일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7대 국회에서도 국회 내에서 이 특위가 만들어져서 결론을 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 결론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때 국회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또 지금 18대 국회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위가 구성되어서 같은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끝에 가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하고 다른 거예요.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것은 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광역과 기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시군 통합 문제를 방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통합이 유도되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주성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체제 개편은 600년 전에 태종 때 8도 체제가 완비가 됐어요. 그다음 100년 전인 갑오경장 때 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8도 체제의 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8도 체제로 나눈 그 당시의 시대정신, 조선이 8도로 나누어서 통치한 기본적인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글썄요. 왜 8도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그것은 산맥과 강, 또 만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통치하기 쉬운 그런 철학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소통하고 통합의 시대예요. 예를 들면 아산, 평택을 경기도, 충청도로 나누고 군산, 장항을 만을 중심으로 전라도하고 충청도로 나누었지만 오늘은 다리 놓고 전부 같은 생활권으로 하는데, 아산 평택항으로 항구 이름을 뭐로 지을 것이냐고 아주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600년 지난 이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힐 때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들어 보면 과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게 실현 가능한 방법이나, 이것은 17대 때에도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결론을 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물론 이게 행정부만으로 될 일도 아니고 국회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관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도 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전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의와 또 정치권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충실히 맞춰 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내도록 장관님께서 박연차 사건 가지고 시달릴 것 같습니다.

박연차 사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집중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성영 의원** 이게 워낙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신문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해서 국민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누가 인사청탁을 하거나 이권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또 우리 정부가 무능했다고는 치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에서는 역사 앞에 떳떳하다 이런 취지로 누차 말씀해 오시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언론보도 내용이나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다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요즘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종결되면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 확연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영 의원** 혹시 장관님 완소남이라는 말 아세요? 완소남이라는 말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완소남이요? 잘 모르겠습

니다.

○**주성영 의원** 완전 소중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완소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못 들어봤는데요.

○**주성영 의원** 완전 쇼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을 가지고 그동안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두 번 글을 썼어요. 이것이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떨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때 쇼하듯이 그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것 아니냐’ 제가 한나라당이 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 언론보도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본 것 같습니다.

○**주성영 의원**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전략이다, 제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법무부·검찰에서 신중하고도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위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렇게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제가 미리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상지대 사건, 제가 17대 국회 때도 여기 대정부질문에서 두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지대 사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상지대뿐만 아니고 그 외 다른 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이 정이사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여러 분규 사학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지대를 얘기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당시 학교 측의 대리인들을 보면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 또 상대방 변호사는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해철 전 수석, 최병모 전 회장, 임종인 전 의원 등, 또 주심대법관이 지금 감사원장으로 가계신 김황식 대법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주성영 의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그런 사

안입니다. 또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총장이 선임됐어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라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당신의 말씀대로 대못을 박아놓고 떠났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책과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법에 따라서 위촉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자격이나 성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가동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퇴하신 분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사퇴가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일단락이 됐다고 봅니다.

○주성영 의원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장관님께서 이런 사학의 분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청와대의 교육 참모진이나 교과부 간부들 중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주성영 의원 그 경과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 입지의 결정은 국무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2차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합 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에서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다음 회의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시켜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성영 의원 이 문제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취지하고 달리 의료기기하고 약품 분야를 분리해서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건 국토연구원 중간 연구용역 결과보고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현재까지 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영 의원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또 이 법안을 심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법안을 들고 왔어요. 이게 첨단의료단지가 아니고 복합단지고 융합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 전체 어디에서 한 군데를 지정하라는 지정도 없으나 법 취지 전체는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것이 입법될 때의 입법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곱씹고 되짚어서 이 첨단의료복합 융합단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노동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10년을 넘어서 미뤄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이게 시한이 끝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금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먼저 밝혀주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 전임자 급여금지하는 기본적인 노동법의 원칙이 노동조합 활동을 풀타임 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대로 시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영 의원 그게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건 가능여부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님도 인식하고 계시겠습니까마는 저는 내년에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30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80%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비를 거두어 가지고 전임자에게 월급 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국회에서 또 만류할 테니까라는 계산에서 그러시는 건 아니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풀타임으로 하는 게 되는데 실제로 가령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 노동조합 활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0시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라고 해서 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법에서도 필요한 단체교섭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간을 위해서 말하자면 타임 오프라고 그러니까 근무로서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합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지 완전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주성영 의원 이게 벌써 13년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이제 임금의 몇 %를 지급해 주는 문제, 그다음 300인, 500인, 1000명 이상 조합장 단위로 잘라서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라도 내년에는…… 이 노동조합법에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주성영 의원 분명히 금지되고 있어요. 그 취지를 그대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 절충점이나 타협점을 찾아서도 법 취지를 살리는 그

런 쪽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영세한 100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무실 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멍가게처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위 복수노동조합이라는 말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뜻하는데 그 영세 노동조합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나 산업별로 좀 더 큰 조직으로 연합해서 하면 훨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업장에 무조건 노동조합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부로서는 결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약화되거나 이런 것은 바라지 않고요,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전임자 급여와 별개로 노동조합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총리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두 번 선거에서, 총선거와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도덕성, 정권의 청렴성은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한다면 총리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성영 의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녹색성장이고 우리 총리님께서도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대통령후보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있으나 일자리와 관련해서 녹색성장 공약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선거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시절에도 없었던 얘기에요. 작년 10월에 나

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4대 강 살리기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 가지고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초기에 휘청거렸던 쇠고기 촛불시위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준비가 돼서 출발한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 출범 후에 정책 여건의 변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인류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일본 도야코에서 있었던 G8 확대정상회의에 가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고 돌아와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발표하시고 나서 추진한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이처럼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미리 발표 안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은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국민과의 철저한 소통을 해야겠다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한편 또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대통령께서 잘못했으면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촛불시위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두 번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를 세우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실패한 참여정부로 만든 총리가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입니다.

이해찬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국민에 대해서 위압적이고 막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지요,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에게 한 행태를 보면 그때 일부 노사모에서 총리 잘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저는 그분이 참여정부를 망가뜨린 최대 공신이라고 봅니다. 뒤늦게 한덕수 총리를 임명해서 추스를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제 지난 시절의 총리들에 대해서 우리 한승수 총리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

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앞선 전임자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저의 각오의 일단을 말씀드리는데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국정을 임함에 있어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고 대통령을 사심 없이 성심성의껏 보좌해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의 녹색성장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격 높은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 얼마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실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구소련이 핵폭탄이 없어서, 대륙 간 탄도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대정신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대정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딱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원군 출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문제, 또 환경부장관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홍보 책자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는 법무부에서 의원들한테까지 배포한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가 이번 국회 대정

부질문 과정에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데요. 4월 6일자 차명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이전고시 발표를 늦추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재 소관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변경고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월 8일 임동규 의원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총리 의견을 물었을 때 “행정수도 건설이 행정기관 이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비능률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는 계획에 대해 변경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총리께서 행정수도 건설의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은 행정기능이 핵심기능이거든요. 행정기능이 핵심기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부가 발표하셨을 적에 보완기능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촉진법에서도 보면 이전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완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행정기능을 핵심기능 하겠다, 중앙행정기관을 확실히 이전하겠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밝혀야지만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가 2005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자족기능 보완 방안이 검토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행정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행정도시를 복합도시로 개발키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은 미흡한 자족기능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러니까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기능이 핵심기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놨을 적에 부족한 기능의 보완이 상당히 쉬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부처가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이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여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변재일 의원 관련부처에 확인해 본 결과 행정기능이 넘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부에서 공표하지 않는 한은 보완기능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합니다.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어느 부처에다가 질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변재일 의원 어느 부처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재일 의원 국토해양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에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도시만 가지고서는 자족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첨단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자족기능을 보완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것은 행복도시건설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거든요.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의 건설 예정지에 1100만 평의 가용면적이 있는데 행정기능 용지로 배정된 것은 1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1000만 평은 처음부터 기타 기능으로 자족기능 확보하기 위해서 유보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능을 확실히 이전하겠다 이것을 먼저 공표하지 않는다면 1000만 평에 대한 활용계획은 상당히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본말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가 보완기능이 만들어지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안 하겠다, 이제 보완기능 마련되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충청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하고 관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러니까 행정기능을 핵심기능으

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변경은 없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하여튼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법의 취지에 맞도록 건설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변재일 의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성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적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제약기능이 분리될 경우에는 그 지원기능까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 관한 평가절차 및 방식, 평가지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방안을 확정된 뒤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의 조성모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치……

○**국무총리 한승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정치적 타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 등의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만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내지는 폐기물 재활용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정을 안 고치고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국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또는 현재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동 중인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연계시킴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앞으로 설치되거나 가동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서 그와 같은 개정 작업을 한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 예, 지금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기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소각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산업단지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준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문제를,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일시에 해소해 주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각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소각장 건설 의무가 폐지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 또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을 바로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화하는 등의 선진화된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또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이런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신 담당 공직자들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다음에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법무부에서 발행해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배포한 책자이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리고 이 책자는 법무부, 정부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정부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래서 이 책자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9000건의 감청이 있었거든요. 9004건의 감청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검찰이 실시한 것이 24건, 경찰이 실시한 것이 94건, 국정원이 실시한 것이 8867건입니다. 그래서 감청은 결과적으로 2008년의 경우 98.5%가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변재일 의원** 방송통신위에서 이것이 4월 7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 맞겠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때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 감청의 98.5%를 집행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뭐 그렇다면 그러리라고

봅니다.

○**변재일 의원** 그런데 지금 책자 3페이지를 보면……

○**법무부장관 김경한** 몇 페이지요?

○**변재일 의원** 3페이지…… 아니 22페이지 보시지요, 22페이지.

이 개정안이 유괴살해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감청이 다 국정원에서 이루어졌지 유괴범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별로 감청도 안 이루어졌어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지금 제일 효과적으로 감청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괴사범입니다.

○**변재일 의원** 그런데 왜 국정원에서 다 감청합니까? 국정원이 유괴범 수사합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아닙니다. 그것을 국정원에서 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유괴사범처럼 감청제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예는 없다 그런……

○**변재일 의원** 예,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감청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저희들은 유괴사범뿐만 아니고 각종 강력사범…… 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의원** 그러면 4쪽하고 10쪽, 19쪽 여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해석이 죽 있습니다. 여기 다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사에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내역이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통신사실확인에 쓸 뿐이지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누차에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 사업자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금 부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변재일 의원** 맞지요? 그래서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과금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쓰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그런데 통비법 2조 ‘마’목에서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 이것이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통신 요금을, 인터넷요금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과금을 위해서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또 이동전화를 할 적에 기지국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기지국 정보는 우리나라 이동전화는 전국이 단일 통화권이라 어디서 걸든 간에 요금이 똑같습니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지국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말이 맞다면 이 항목은 빼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아니, 그것은……

○**변재일 의원** 또 한 가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GPS 위치정보, 이동전화하기 위해서 GPS 위치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전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넣습니까?

왜 이것이 요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허위사실을 돌립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아니,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유선전화통신 및 무선전화통신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변재일 의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변재일 의원**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갖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이 뒤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허위자료를 갖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저는 이것이 허위사실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재일 의원**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GPS 위치정보가 휴대폰의 기능이다, 예컨대 친구찾기다 이렇게 해서 17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친구찾기 서비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GPS 수신기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모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뭐 제가……

○**변재일 의원** 이동전화기지국 간의 삼각측량법으로 제공하고 있지 GPS 수신기능 없습니다. 왜 GPS 수신기능이 통신사실확인용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자료를 배포합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글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재일 의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17페이지에 통신회사의 위치정보는 통신회사에 보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버 용량이나 비용부담상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사업자는 이 위치정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개정안입니다—제15조의2 여기에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보관 의무가 없다고 보시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년 간 보관하고 위치정보는 2년 간 보관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지요.

○**변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 법이 행정부에 넘어가서 국정원과 법무부가 집행하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 못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보관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한 것은……

○**변재일 의원** 자, 보관할 수 없다……

자,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아니고 완전 빼야 되는데 들어가도 보관할 수 없다 이것은 명확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위치정보를 보관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서버 용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해서……

○**변재일 의원** 위치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장관님의 휴대폰을 24시간 매 한 시간마다 위치를 보관한다고 한다면 GPS 위치,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것만 넣으면 됩니다. 서버 용량에 전혀 부담도 안 되고 비용도 안 듭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러니까 위치정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필요한 시점 그 이후의 그때그때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변재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까.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6페이지, 15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페이지 수를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를 해서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변재일 의원** 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범죄 수사기관이든 정보 수사기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직접감청은 하지 않는다, 간접감청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렇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 9조1항 2호에서 예외를 뒀지요? 개정안 9조1항2호에서 제7조1항2호, 제8조8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 또 기무사가 군용전기통신법에 집행하는 경우는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1항과 다르게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놨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감청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런데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법안은 의원발의 입법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이고 다만 그 방향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비슷하고 또 주무관서이기 때문에 한 건에 그 상세한……

○**변재일 의원** 의원발의 법안인데 이런 내용을 배포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변재일 의원** 의원발의 법안인데 이런 내용을 배포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재일 의원** 그러니까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조금 서면질의를 주시면……

○**변재일 의원** 서면질의가 아니라 공개토론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공개토론을……

○**변재일 의원** 공개토론을 법무부장관하고 나중에 합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만 기회에 한번 연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예.

자, 이러니까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은 외국인이라는, 대상을 특정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직접감청 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직접감청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경우에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국정원 건물 내에서 전국의 이동전화, 유선전화를 직접감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왜 법에서 터 놓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직접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돼 있고 엄격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운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변재일 의원** 엄격한 요건이 돼 있는데 우리 통신비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긴급통신 제한조치, 긴급감청과 긴급위치추적에 대한 제재 기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 통계는 나오지도 않고, 국정원이 긴급하게 하고 보관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시스템 가지고 직접 했는데.

○**법무부장관 김경한** 긴급감청은 매년 그거 10건 전후입니다. 그렇게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제가 방송통신위에도 요구했고, 했습니다. 긴급감청이 2008년도에 2건밖에 없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긴급감청을 실시하고 36시간 이내에 끝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긴급감청을 신청하고 영장을 신청했더니 영장이 반려된 통계가 얼마나, 이 통계 없습니다. 안 줍니다.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런 통계는 아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러나 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법무부장관 김경한** 왜냐하면 향후에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재일 의원** 자, 통신비밀보호법 긴급통신제한조치 조항에 검찰, 경찰, 통신사업자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대장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지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뭇을 유지한다고요?

○**변재일 의원** 대장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대장이요?

○**변재일 의원** 예, 법에.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뭔가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재일 의원**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것은……

○**변재일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지도 않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것도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비법 제13조에서 연 2회 이상 통신사실 자료 제공현황을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의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에서도 ‘이런 자료 없다, 이런 자료 제공했다가 나 목 잘린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개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과 경찰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약하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예를 들면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시시각각으로 옮겨 가는데 언제 법원에 가서 영장 받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10여 건 전후로 밖에는 활용이 안 됐습니다. 이걸 들어서 전체 법이 불비하다 하는 것은 조금……

○**변재일 의원** 연간 10여 건 이하인 것 자신 있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범죄 수사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제1차적 감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예, 변재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인 전남 진도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어르신네들이 한 아흔 분이나 와 계십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한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구멍 난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발전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선진화된 한국으로 뻗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의 성격상 한

번 뒤지면 영원히 따라잡기가 곤란한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학을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연구를 막는 규정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줄기세포 분야는 이미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21세기의 최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분야에 대해서 정부투자금이 400억도 미처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줄기세포 전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리님께 대한민국 정부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나 난자를 사용해서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수립하는 연구인데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찬반론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미국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생명윤리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물론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2월에는 차병원에서 체세포복제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의가 언제 잡혀 있는지 아직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총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초에 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중동의 카타르에 가서 의료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한 적 있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의원 왜 그랬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우리의 블루오션 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 태국이 100만 명, 싱가포르가 35만 명인 데 반해서 우리 한국은 2만 5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싱가포르와 태국은 많고 한국은 적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환자유치가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2009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외국환자들의 국내유치 그리고 국내병원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우선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대단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코디네이터라든지 의료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간에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의료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조사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주고 중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콜센터에 연결해서 바로 상담해 주는 그런 등등의 제도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보건복지가족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법무부와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서 5월 1일 이전에 외국인 환자에게는 비자를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의

료기관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미국 등 아주 소규모로 한 30여 개의 료기관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현지의 시장 사정을 잘 모릅니다. 현지의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장조사라든지 정보안내를 중심으로 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비자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지난번에 KDI에서 3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71%가 나왔습니다.

공공의료는 보장하고 현재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께서 KDI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야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반대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는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의 허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고,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면 그 때문에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받을 수가 있고 또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설령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연지정제는 확고부동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이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은 의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자기부담을 주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부와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오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의 양극화와 의료비용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의 논쟁은 있어 왔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라든지

도입할 경우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또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번 추경에서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보건복지시설 개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5 대 5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율을 수정할 생각 없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당초에는 2500억 정도를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5 대 5라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받으니까 지금 한 81개 사업 350억 정도가……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지사님과 장관 워크숍 때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이번 추경 자체가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지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인수를 해 주고 이차보전하는 방법으로 그 재원을 보전한다고 하는 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심의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최근에 사회복지보조금 관련해서 말썽이 일어났었는데요,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결국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증원되어야 된다,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전체 정원이 1만 706명인데 정원미달이 또 271명 있더라고요. 우선 급한 대로 이 미달된 정원부터 채워 나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행정안전부장

관님과 협의해서 조기에 충원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리고 이 부족한 인력을 현장의 통장과 반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방안을 저의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조사·발굴은 할 수 있지만 지급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늘리는 방법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을 간편하게 해서 업무를 줄여주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작업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 관리망이 11월 달에 가동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저는 통장과 반장을 활용하면 수급자가 실제 장부대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이 주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여쭙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복지보조금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말썽이 났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징계를 내리는데, 지자체에서 봐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그 징계에 차이가 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옛그제, 4월 1일 날 표준조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을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조례를, 표준조례를 보냈고 그 이전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양형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앞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인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부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재정법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그 지침을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기존 선수들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비과학적인 훈련체계 문제, 선수등록 체계의 미확립 문제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장실** 예.

○**심재철 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가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장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또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계획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수립해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전문 장애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실업팀의 창단입니다. 그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장실** 지금 국민은행, 청주시청, 하이원리조트 같은 데서 장애인 실업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실업팀들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기업체나 공익재단 쪽에서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장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사정도 어렵고 원래 이쪽 분야에 대한 기부가 덜 알려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장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관세 감면, 체육용품 들어올 때 관세 감면은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대한체육회는 해당이 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입장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장실** 사실상 존경

하는 심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용품은 수요가 적고 수익이 적어가지고 그동안 다소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세 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하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지정및관리요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장애인 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언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동의합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방송언어 심의규정에 보면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이나 어조나 은어나 유행어나 조어나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언어는 ‘대한민국 말이 썩고 있다. 막말에 빠졌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유감스럽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방송에서의 내용을 지금까지도 심의를 해 왔지만 바른말을 쓰는지, 국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언어순화 심의 기능을 앞으로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정말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적 품격이 반영되는 것으로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화를 지향하는 길목에서 문화적 품격은 높아져야 되고 그 선봉에 방송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방송심의위원회는 늘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데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얘기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심의해서, 매

일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언어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언어심의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마는 심의위원회는 매주에 한 번씩 열리고 또 전체회의는 격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모니터링을 매일 매시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심의를 해서 바르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까지를 포함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예.

현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스스로 바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심의 결과들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이 효과들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영화나 가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가르치는 절대시간이 늘어야 됩니다. 현재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기본 의사소통을 하려면 최소한 2500시간은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초중고 해 봐야 730시간,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영어교사가 부담 없이 영어로 가르치는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우리 영어교사님들의 수준, 학생들에게 회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길러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폭 강화하고 평가해서 인사에 까지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눈에 불

을 쳐고 공부를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리고 영어평가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40만 명이 응시를 합니다. TOEIC이나 TOEFL 같은 거요. 그리고 240만 명 중에서 220만 명이 TOEIC과 TOEFL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230억 원 정도의 국부가 로열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TOEIC을 보면 TOEIC 응시생의 80%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TOEIC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TOEIC 열풍이 불고 있고 압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형 TOEFL이라고 해서 한국영어평가시험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해서 제1급은 대학교 2~3학년 수준 영어로 해서 그것이 아마 TOEIC이나 TOEFL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 2·3급은 고등학교 2~3학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1·2·3급 세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세 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보기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개발해서 그 하나의 점수에서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으로 하되 그 중에서 얼마를 받으면…… 중고등 실력 정도면 몇 점 정도 받는 것이다, 대학 실력이면 몇 점 정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3등급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1등급 수준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수준만 되어도 실용영어 수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는 그 시험만 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디자인 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시험을 세 종류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한 종류만 개발하되 그 점수만

가지면 ‘아, 이 시험에서 300 정도면 그냥 일상영어를 소화하는 정도다 그리고 대학영어를 하려면 이 시험에서는 800점은 넘어야 된다’랄지 이렇게 하나의 종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심재철 의원**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심재철 의원** 그 부분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심재철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AM이든 FM이든 영어전문 라디오를 개설하거나 위성채널이든지 케이블 TV든지 영어전문 채널 또는 라디오 주파수 배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심재철 의원** 좋은 생각인데 추진할 거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는 지금, 방송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를 특별히 할 수 있는…… EBS, 아 죄송합니다. EBS 2에 더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수준의 영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라디오 채널 확보가 가장 쉬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FM 주파수를 하나 배당을 해서 영어전문 라디오를 하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한테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세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급,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전교조의 경우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반대에 뛰어들었고 FTA 반대에 뛰어들었고 광우병에 뛰어들었고 그랬는데 전교조에 작년 지원한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교조는 우리 부로 봐서는 전국 교원노조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불법시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돈이 지원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국민 세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꼴인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법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 같은 것을……

○**심재철 의원** 법이 아니라 단체협약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소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체협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법에도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돈을 지금 제공을 하는데 전교조에 45억 원, 한교조에 12억 원, 자유교원노조에 7억 원 이렇게 막대한 국민 세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하여간 노조와의 단체협약 부분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12.3%랄지 매우 낮은, 15%가 안 되는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 제도,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뭐 저희가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도가 마련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제가 동의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재검토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리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서 지방의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특히나 지금의 분권교부세가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아우성인데, 특히나 사회복지비의 지방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적자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역시 중앙과 마찬가지로 부담의 분담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뭔가 특단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까지 지방에 내려갔던 동일한 액수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 바뀌면 동일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복지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사실은 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너무 지우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지방에 대한, 지방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을 그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심재철 의원** 아까 복지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 개량하는 데 처음에는 500억하다가 매칭 비율이 5 대 5다 하니까 대폭 줄어서 3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매칭 비율 5 대 5를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재정의 운영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정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율을 지방 쪽이 낮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자립률이 강한, 센 이런 지

방의 경우하고 아주 취약한 지역하고 조금 차별해서 이런 문제는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지요? 자선사업 하려고 병원을 하는 건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건강은 외부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해서 공공성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와 같이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지금 병원에 가서 무료로 하는, 자선사업 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 못지않게 사유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개인 병원이 망하면 그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 병원이 망하면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는가……

○**심재철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심재철 의원** 현재 국고로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국고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첨단 기기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많은 투자를 위해서는 시중의 유희자본이나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바로 영리의료법인에 관해서는 굉장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총리는 개인적으로 자유시장, 그 시장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공공성이 있는 재화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이, 그와 같은 공공성이 창출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한 시장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정부 안에도, 밖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일 다수의 국민들이 영리의료법인을 원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영리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 의료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영리의료법인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건 그렇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17개 부문 가운데 3개 글로벌 헬스 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의료진이 굉장히 훌륭하고 의료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태국 같은 데는 1년에 한 5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와 치료를 받고 가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외국서부터 오는 환자들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리법인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건강보험체계, 현재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복지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지정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공공의료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보장을 하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영리법인의 질 높은 서비스로 국제사회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당연지정제를 운영을 하면서 영리법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우리가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원인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점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원인이라기보다 이제 만혼이 우선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자·여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회의 기능이 다변화되면서 여성들의 직장 활동이 강해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여성들도 있고 해서 소위 저출산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애기를 낳고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 보육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완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와 같은 여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딱 한 가지가 이유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 문

제가 앞으로 적지 않게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도 연결이 되고 교육부도 연결이 되고 노동부도 연결이 되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심재철 의원** 그런 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존에는 대통령, 총리 산하로 있다가 이번에는 복지부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 개의 부처가 동시에 연결되는 만큼 이 부분은 최소한 총리 산하 위원회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중요성으로 보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옳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각 부처로부터 나온—아마 1급들일 것입니다—1급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일 잘 아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은 보건복지가족부로 갔다고 하더라도, 환원됐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있어서 절대로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께서 그와 같은 제의를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전기자동차 관련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 방향은 기존의 내연기관,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차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력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하이브리드나 연료전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기자동차로 방향을 수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막 시작되는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연료전지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기술이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하이브리드카—수소연료전지—전기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이것이 만일 급속히 기술 발전이 있어서 획기적인 생산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이 앞서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마는 순서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이제 대통령께서 집권 2년차이고 지금부터는 잘못하면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심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계속하는 동안에 경기도 안양 동안구를 지역구민 마흔 분이 방청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진섭 의원 소개로 경기도 광주시의 지역구민 30인이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끝 순서입니다.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총리, 행복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 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직접 그 진행 과정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국토해양부장관이 대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들이, 특히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꺾꺾테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도 자체가 전체로 얘기해서 몇%다, 한 30이다, 40이다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3월 현재 전체 사업비 대비 2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진도로 봐서는 상반기 내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후속작업

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행복도시에 대해서 추진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야단입니다. 현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 기관을 줄이거나 아예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희 당의 조순형 의원님께서 세종시 이전 고시 문제와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좋은 안을 내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할 말씀이신지 어안이 병병합니다.

총리,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처음부터 국회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깁니까?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4일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총리를 방문해서 3월 말까지 행복도시 이전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이전변경 고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안부장관에 물어 보겠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행복도시는 아시다시피 동료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때마다 물어 보고, 또 충청권 언론에서 연일 톱기사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에게 물어 보겠다, 이것은 총리께서는 본인 스스로 실세 총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실세 총리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고 됩니까? 실세 총리라면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면서 보고할 텐데 장관한테 물어 보겠다니 과연 실세 총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2월 28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전부처의 변경은 2005년 10월 5일 고시된 이전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부처의 통폐합과 부처명이 변경된 아주 경미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 승인 없어도 행안부장관이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매일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이것은 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행정복합도시의 법적인 지위

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내 주시면 정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장내 소란)

조금 가만히 계세요.

○임영호 의원 지금 총리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꾸 국회나 정치계에게 미루고, 또 한 가지는 법에 규정도 없는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알맹이 없는 논리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이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기관 고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총리.

○국무총리 한승수 행복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지 않고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처별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임영호 의원 총리,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의 인구 목표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30만입니까, 40만입니까, 50만입니까, 60만입니까? 객관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마 한 50만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영호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50만은 지금 당장 50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달성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조선 고종 때만 해도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당시 20만 이었던 서울시를 50만 명 정도의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앞둔 1944년에는 그 2배인 98만 명에 달했고 지금은 1000만 명 정도 되는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족기능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족기능을 완비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가 주장하는 자족기능 타령은 행복도시 건설을

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구실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정부로서는 물론 당장에 50만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족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 행복도시를 왜 건설하는지 아십니까?

미션과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총리님께서, 말하자면 이대정부질문 때 벌써 수십 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도시의 미션과 목표도 모르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총리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션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하에, 그 사명하에 목표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미션 완수를 위해서 다섯 가지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나 정부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중에서 세 번째 자족기능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중에는, 다섯 개 중에서 다섯 번째 목표, 주민 재정착과 자치단체의 출범을 적극 지원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수용당하고도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받아들인 주민들의 고통과 한숨 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 정부가 뭐했습니까? 무조건 국회에 밀고, 정치에 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총리, 이런 데도 자족기능 타령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총리,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자족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한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들어갔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 기한이 6월입니다. 지금이 4월이에요. 5, 6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국토해양부 또는 행복청 다 봤더니 아이디어 차원만 그냥 나열할 뿐입니다. 무슨 녹색성장도시다, 과학기술도시다, 교육도시다 이겁니다.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이것 정말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서는 이미 행복도시건설청의 성과계획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자를. 이것은 지난 8일 박상돈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총리께 이 책자를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죄송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준비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오늘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금 이 체크한 것이 전부 다 보완기능에 관한 겁니다. 이대로만 실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말 핑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과계획서 112쪽을 한번 보면 행복도시의 기본적인 도시 그리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도시 채우기인 자족기능 조성을 위해서 중요 정책과제 세 가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읽어봤어요, 세 가지가 뭔가. 이 세 가지만 추진하면 지금 걱정할 것 없어요. 다시 뭐 자꾸 부처한테 탁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자꾸 보완 타령만 하시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볼때 우리 국민들이 또 충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을 빼버리고 말하자면 다른 데로 변질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 안 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어제도 우리 선진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런데 계획에 변화는 없다고 하

지만 하는 일은 전연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 중앙행정기관은 언제부터 행복도시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012년이 아닌가요?

○임영호 의원 맞습니다. 2012년에서 14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렇지요. 바로 자족기능이라는 것은 총리실이 제일 먼저 이전할 때 바로 자족기능이 형성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확실하게 이전해야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50만의 계획된 도시가 되는 거지, 기관은 안 간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당장 행복시 내에 고려대학교가 가기로 돼 있는데 고려대학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캠퍼스 건립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뉴스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총리, 세종시특별법은 의무적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의사항입니까? 당연히 입법사항이죠? 그래서 법적 지위 또한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다시 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복도시에 대한 현 집권층의 의도가 여기저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밀접한 분이 회장으로 있는 한 신문은 연일 회의론으로 일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세종시를 과천시 수준으로 단순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했던 모 의원은 행복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한나라당 모 의원도 세종시 백지화를 발언했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여권 상층부에 불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의 중단과 무력화 및 변질론을 그대로 대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 정권에서는 서자 취급하고 있는 세종시를 아예 축소, 변질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각본에 의한 거라 생각되는데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에 변화가 없고요.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아시다시피 당론하고 상관없이 와서 얘기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차명진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제가 마음에 닿습니다. 10조 원 발언입니다.

차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 때 “저 같으면 충청남도에 10조 원을 공짜로 주겠다. 공짜로 줘서 당신들이 터를 닦아라.”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충청인이 무슨 돈이나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이같은 발언은 충청인의 자존심을 깎그리 짓밟는 정말로 충청인을 헛바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토목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어떤 의원은 행복도시를 에코도시나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로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수준으로 전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이 아니고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임영호 의원 행복도시가 이 정도라면 정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백지화될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총리,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행복도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2004년 10월 행정 수도가 위헌 심판이 나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05년 3월에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표는 대표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오늘의 행복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한나라당은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비롯해서 싹쓸이한 것입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당선 후에 행복도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 28일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표 세종시, 명품첨단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이렇게 해서 어렵게 탄생한 옥동자를 왜 사생아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7일 대정부질문 시 총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도시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도시 건설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영호 의원 제가 보기에 ‘행복도시는 별거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의미를 읽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그건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호 의원 정말로 총리님, 한 표가 아쉬울 때는 간과 쓸개까지 다 빼 줄 것 같이 하더니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표를 갖고 국민

을 정말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 국민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배신의 정치다, 이와 같은 배신의 정치가 바로 망국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대통령 복이 없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대통령마다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재임 중에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안타깝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 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앞으로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행복도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정말로 행복도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부터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바로 이것이 후진국 정치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재앙입니다.

총리, 행복도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님 말은 다 안 믿어요, 이제.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이 정부에서는 지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행복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충청민과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임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방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부초등학교, 경기도 성남 신상진 의원 소개로 학생들이 지금 방청석을 한번 죽 보고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소개로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 80여 개 한센인 정착촌 주민 15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정해걸 의원 소개로 방청석에는 안동사범대학교 동창생 마흔한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성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들 고달프지만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더 서럽고 외롭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고난 앞에 용기와 투지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 주지 못한다면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만 깊어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외계층 살리기와 진정한 사회통합만이 오늘의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세계 최초로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한센병이 잠깐 들었었다는 이유로 제 일평생 동안 지독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제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과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오늘날 한센인이 처한 사회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외면받는 이런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한센인들이 겪은 고통과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차별과 사회적 냉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짓밟혔습니다.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한센병 환자들은 국가의 격리·수용 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총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격리·수용 과정에서 감금, 폭행, 강제 단종, 강제 낙태 등 이러한 인권 침해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전국 각지에서 한센인 학살과 유혈사건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임두성 의원 국가와 사회는 형극의 멍에 갇힌 한센인들에게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나마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센인들의 눈물과 통한의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임두성 의원 제가 작년에 한센인 생활 실태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한센인이 질병 후유증과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에 한센병의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이미 한센병은 우리 한국에서 퇴치된 질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의 정책은 예방과 치유라고 하는 이런 질병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한센병 문제야말로, 한센인의 문제야말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전적으로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센병력자가 약 1만 5000명에 대부분 고령이고 복합 장애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고 중증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 수요의 서비스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정책이 한센인 복지 증진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 17대 국회에서 한센인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보상 조치가 미흡한 현행 법률을 대체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한센인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한센인 대표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살아온 저분들을 위해서 내각책임자인 총리께서 한센인들이 당한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위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임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 총리 이전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센인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냉대와 차별·편견 속에서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께서 한센인 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하신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한센인을 과거와 다르게 대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는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과 함께 한센인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생각이 결코 없었습니다마는 기왕에 한센인 여러분이 어려운 걸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멀리 국회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 내외는 사회적 장벽과 냉대에 그리고 조롱과 편견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한센인 여러분에게 항상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그러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집사람은 3도 이상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는 경남 산청 성심인애병원에, 그리고 총리 내외는 노기남 대주교

님이 세우시고 이용재 신부님이 맡아 이끌다 돌아가신 후에 지금은 김화태 신부님이 맡고 계신 안양 성나자로마을의 한센인 여러분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직접 위로해 드리고 도와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는 지난 12월 24일 저녁 크리스마스 미사도 사실 그곳 안양 성나자로마을 성당에 가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 내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한센인 여러분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성 의원 오늘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한센인 역사 100년, 그 처절한 삶을 살아온 전국 2만 명 우리 한센 가족들, 역대 60년 한국 역사가 흘러온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총리의 사과 표명은 대한민국 인권 신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날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역대 다른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또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왜곡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이명박 정권의 내각 책임자에게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세운 이 정권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맞잡고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전국 2만 한센인과 함께 오늘 총리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임두성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우울한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임두성 의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30명의 우리 국민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이삼십 대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임두성 의원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아주 큰 바이러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자살 차단을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정쟁에 밀려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자살예방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지금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너무 큼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비용이 3조 1000억 원입니다마는 10만 명당 OECD 평균은 11명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8.7명이 자살을 해서 OECD보다 훨씬 높은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 제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도 약 22.3%나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코리아입니다.

우울증은 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총리께서는 우울증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은 개인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경쟁적인 사회구조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두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기침체, 가정불화, 실업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친 영향이 아주 큼니다.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지금의 국가 위기상황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우울한 코리아를 날려버리고 밝고 희망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밝고 활기찬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종교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또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

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민관 협력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에 대한 문화가 좀 더 많이 전파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은 대표적 복지정책들이 있었습니다. YS 정부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있었고 DJ 정부는 생산적 복지 기조하에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모토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명박 정부의 4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가 능동적인 복지입니다. 능동적 복지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4대 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위기가 불어 닥치다 보니까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늘어서 이것까지도 이제 관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초기에 세웠던 목표보다는 힘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내세워 가지고 경제 분야의 녹색 뉴딜하고 함께 사회·경제 양쪽에서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총리의 답변도 그렇고 또 다른 장관님들의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한 참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복지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실직하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사회안정망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복지지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저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지향점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둘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총리, 건강 불평등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들어 봤습니다. 지역이나 소득 간의 건강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그렇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돈 없는 사람이 덜 건강하다면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 간 건강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은 암 환자의 사망률이 실제로 더 높습니다.

또 지역간 의료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지역에 따라서 2배나 차이가 나고 응급실과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총리, 지역 간 소득 간 의료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는 건강 격차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선은 공공의료를 확충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라든가 기타 희귀성 난치 질환자 지원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공의료 보건의료 확충 대책과 또 건강증진 종합계획 등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영국은 이미 1977년도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WHO는 '2020년까지 국가 내 경제집단 간 건강 격차를 25% 이내로 감소시켜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WHO 권고 목표

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건강 격차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 WHO에서 권고한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런 등으로 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건강 격차에 대한 지표도 없고 또 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래서 빨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 불평등 지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O의 기준에 맞추어서.

○임두성 의원 본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총리 산하에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이 문제는, 그 설치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감사합니다.

○임두성 의원 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부랑인과 노숙인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를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러한 경기침체 여파로 부랑인·노숙인이 얼른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장관님, 부랑인·노숙인 시설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난해 겨울에 영등포역사 주변하고 보현의 집하고 인근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보고 또 은평의 마을 등 몇 곳의 시설을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숙인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나면 일정 기간 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저도 지금 민생 탐방을 위해서

수시로 노숙인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시설의 운영 자체가 단순 수용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한번 들어오면 거기서 늙어 죽어도 됩니다. 도저히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잘 적응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일부 시설은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장애인 시설을 짓고 정신장애인이 계신 곳은 정신장애인 시설로 해서 시설을 분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 시설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대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임두성 의원 참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국가의 재정을 한없이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질환자는 정신 보건 시설로 보내고 또는 알코올중독자나 약물중독자는 또 그런 중독 전문 치료 시설로 보내고 건강한 사람은 어떤 다른 정신 교육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두성 의원 저는 인간의 성공 비결이 결코 삶의 조건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설을 다니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자존감을 갖게 해 주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겠나……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 사회활동 봉사활동이나, 이 노숙인들을 통해서, 건강한 노숙인, 연극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인공 역할을 맡게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욕을 느끼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혹시 장관님 도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희들은 지금 노숙인들이 재기의 의지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적기는 하지만 또 인문교육 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되살리지 못하면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은 더 큰 쇠락의 길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진정한 사회 통합의 방법에 대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주체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대안으로 다섯 건의 법률안도 만들었습니다.

대공황 속에서 뉴딜이 나왔고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현대적 복지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해답은 바로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과연 무엇으로 타개해야 할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의 그늘에 가렸던 소외계층이 그 그늘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거듭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될 것입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임두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센인 여러분!
 전북 고창 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마디로 이전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입니다.
 학교 다양화, 학부모 선택권, 학생 선발권이란 이름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시 업무의 대교협 이관과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하여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 금지,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의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표집이 아닌 전집 방식의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성적 조작, 교사 대량 해임, 파면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결과와 수능 성적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교육 정책과 거꾸로만 가는 현 정부가 유독 2007년 참여 정부가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도만큼은 취임 직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폐지 축소가 아닌 전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정부가 왜 그토록 입학사정관제도에 올인하는지 본 의원은 그 진짜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개구리 교육 프로젝트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현 정부에서 교육 정책의 핵심은 학교 다양화를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또 학부모의 선택권,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생 선발권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과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통하여 30년 넘게 유지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 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요, 그걸 뭐 평준화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평준화에서 다 돌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김춘진 의원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위해서 세칭 SKY 대학에 많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특목고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전 정부 시절에 많이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계승해 온 거고요. 특목고가 갖는 목적에 맞지 않게 그 학교들이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들은 그 학교들 나름대로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학교 서열화가 되면 평준화 정책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학교가 서열화된다는 것이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열화라면 우리가 옛날 제가 어렸을 시절에 대개 보면 학교 이름만 들어도 어느 몇 번째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열화보다.
○김춘진 의원 서울대학이나 세칭 SKY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학교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서열화보다는 다양화에 의해서……
○김춘진 의원 아, 다양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학교 수만 해도 사실 옛날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서울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발표했듯이 대입 업무를 대교협에 이관을 했지요? 그래서 3단계 자율화를 내세워 내신반영비율 등 앞으로 입시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개별 대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교협은 2011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교협 관계자의 3불 정책 폐지발언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게 딱 된 것보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은 지금 맞지 않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그러면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3불 정책이 과연 유지될지 폐지될지 모든 국민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3불 정책은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그게 하나의 철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3불 정책이 만들어진 그러한 시대적 배경 또 현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불 정책을 폐지할 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3불 정책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2012년에 폐지하겠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012년에 폐지하겠다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춘진 의원** 아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3불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대학입시라든지 대학기능의 다양화가 같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제가 흑이나 백이나로 대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에요. 그냥 3불 정책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여 입학제다 그러면 기여 입학제를……

○**김춘진 의원** 아, 부분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반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요. 제가 이미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춘진 의원** 분명히 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지하겠다고 동의하실 건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3불 정책을 폐지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청개구리 교육 프로젝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내려져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그런데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취

지가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김춘진 의원이든 그 당시에 상임위원,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이 연구의 목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좀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이 연구의 목적에 한정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 자료,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께 열람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성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학교 지우고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명은 완전히 없어요.

○**김춘진 의원** 자, 그걸 보신 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면 어떡하지요? 각서를 썼지만 어떻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 말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각서를 쓰고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김춘진 의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거기에서 도덕적인 것 외에 법률적인 조치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춘진 의원** 시골에 있는 학교, 학교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몇 등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그것에 성적도…… 그것을 그냥 성적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등급화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몇 개로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 이유가 뭘니까, 공개하는 이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공개하는 이유는……

○**김춘진 의원** 의원이 해 달라고 그래서 공개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하나고요. 또 사실은 학부모로서도 자기 지역 혹은 자기 자

녀가 속하는 시도 이런 쪽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알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바로 그것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수능 성적에 따라서 학교 서열화가 매겨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수능 성적만 발표하지, 아니 성적이 아니고 수능 등급만 발표하지 우리가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학업성취도평가, 146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업성취도평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취도가, 기초에 못 미친 학생들 그러니까 기초 미달 학생이라고 합니다. 미달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를 발견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를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표집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표집하면 불가능합니다.

○**김춘진 의원** 왜 불가능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표집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지만 개개 학교의 성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요즘에 통계기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 학교를 전부 이렇게 표집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춘진 의원** 이미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기초학력 미달, 교육청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화 운동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기 시작할 때 보는 진단평가 같은 것은 이 학생

이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취도하고는 다릅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기초 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권도 많이 주고, 그 학교에 자율권도 많이 주고 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교사들, 우수 교사들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14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 실시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46억 이상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기준에서 학력 미달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런 학교들을 지원함으로써 평준화에 이르지 못한 학교를 평준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평준화 아닙니까? 상향 평준화이지요.

만일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학교를 방치하면 그 학교가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그 학교에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지원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 할 겁니다.

○**김춘진 의원** 앞으로 한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시험을 지금 막 봤고……

○**김춘진 의원** 시험을 막 본 게 아니라 그동안에 기초학력 미달자, 교육청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로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말씀드린 이 시험은 작년 10월에 처음 본 겁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시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지금까

지 한 것은 소위 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어려운 사람 여기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으로써 모든 것이 다 커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인적 구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또 교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얼마나 열성 있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춘진 의원**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시험에 나타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 지역에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그 열성에 교사들도 아주 감동해 가지고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강북 지역의 어느 학교보다도 훌륭한 그러한 성취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왔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학력 미달자는 조손가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제도를 취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조손가정이요? 지금 그건 개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김춘진 의원** 학교 전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는 또 거기대로 지원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초 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춘진 의원** 조손가정이, 대표적인 학력 미달 학생입니다.

아니, 그렇게 학력 미달자 찾기 위해서 쓸 돈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것 보면,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때 시범 실시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236억으로 50%나 증가되었지요. 또 포항공대는 100%를 입학사정관으로 뽑겠

다고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수백 수십 배까지 ‘묻지마’ 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호 차관께서는 공공연하게 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입학사정관제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입시제도 중에는 가장 선진화된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정부에서 온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제도 자체가 가장 선진화된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한……

지난 국감 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임시직으로 한 1년짜리 쓰고 또 전혀 전공과도 무관하고 자질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입학사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입한 지가, 2007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한 것은 입학사정관 도입의 3단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로 내실화 단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화 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듭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학교 또는 했던 학교 10개 학교를 저희가 선발해서 그 학교에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로 하여금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함으로써 다른 대학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세칭 SKY 대학은 자료조차 제출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SKY 대……

○**김춘진 의원** 국감 때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건 뭐……

입학사정관에 대해서요?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김춘진 의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뭐……

○**김춘진 의원** 바로 그렇게 자신이 없는 제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은 다 제출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김춘진 의원** 자, 이것 보십시오.

입학사정관 제도가 만일에 기여금을 많이 낸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또 자립형 사립학교나 자율형 사립학교, 특목고, 외고 이런 학생들만 전부 다 뽑는다면 교과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 만일 생긴다면 그것은 입학사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학생이 수능에서 250점을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학교는 평균 수능 점수가 250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의 학생이 250점을 맞았는데 그 학교의 평균 수능 점수는 200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같은 250점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구분하느냐? 바로 입학사정관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굉장히 귀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귀중한 제도인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게 제대로 그 목적을……

○**김춘진 의원** 권한을 주지 않고 또 학교에서는 손쉽게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학생들만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속칭 자사고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3불 정책 폐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입학제도가 다양해지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얼마나 만들려고 합니까? 100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그래서 3만 6000명으로 늘어나지요. 6배나 늘어납니다.

바로 그 학생들이 입학할 시점에 입학사정관이 아주 정착화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세칭 일류

대학에서 다 뽑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뽑지는……

○**김춘진 의원** 아, 저 고대에서 뽑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요.

○**김춘진 의원** 그런데 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처벌도 아니었습니다. 명분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입학사정관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전혀 별개의 2개의 제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를 만든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려면 1년에 들어가는 등록금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되고 또 거기에다가 기숙사비 하면 1000만 원이 듭니다. 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만 들어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는 바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의무입니다.

○**김춘진 의원** 아, 그러면 전부 다 무료로 해주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뽑고 아마 장학금을 많이 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가난한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들어가면 그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김춘진 의원** 그리고 여기의 3만 6000명이 나오게 되면 SKY 대학 정원의 3배나 됩니다.

바로 이러한 데에 입학사정관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특히 유념을 해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등록금 많이 내지요?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면 세금 많이 내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그러면 내신등급을 낮게 만든다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입학사정관은 내신으로서 꼭 학생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김춘진 의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신으로 뽑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학교를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입학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렇게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내신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고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같은 점수나 혹은 낮은 점수를 맞은 학생도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미국은 80년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전면 확대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문제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마 제 생각에도 전면 확대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그러면 수시에서, 어떤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뽑도록 하겠습니까, 수시나 일반전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거야 뭐 일반하고 수시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김춘진 의원** 바로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귀족학교 출신이 급격히 6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2012년에는 3만 6000명이 배출됩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앉겠습니까?

‘묻지마’ 식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에 KIST를 만들고 과학기술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큰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큰 나라로 생각합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자, 대한민국 그 연구비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춘진 의원** 연구비.

○**국무총리 한승수** 연구비요?

○**김춘진 의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를 타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김춘진 의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컨트를 타워가 없다. 그래서 유사한 분야에 연구비가 중복 투자 투입이 되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가 상호 연결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아마 과거에 과학기술부가 있었는데, 특히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의 자격을 가지고 내각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 조직을 이렇게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뒤에 많이 진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정부의 연구비는 기초연구 분야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응용이나 개발 연구에 하지 말라 그래도 많이 투입합니다. 그런데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가 반드시 기초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가 비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지만 R&D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하기 전에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의 기초를 닦기 위한 응용기술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장동력 창출하는 17개 부분 같은 것은 민간 등이 우선으로 참여합니다마는

정부부문에서도 굉장한 액수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정부에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반절입니다, 미국이나 그런 데 비해서.

그래서 기초연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기업이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 분배가 잘못되었다, 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이 없지만 우리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조업 산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라의 경우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전한 것을 갖다가 응용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과학기술의 정책 추진이 그동안에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우리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지요, 예.

○김춘진 의원 일본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일본의 경우는 거기도 문부 과학성이 있고 또 경제통상성인가 있어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일본의 문부성에 65%의 연구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소가? 32%입니다. 기재부에 35%입니다.

지금 바로 문체가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초연구에서 경쟁력이 나옵니다. 과거의 추격형은 바로 개발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우리의 기초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2배를 증액시키겠다, 세계 선진국에서는 기초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기초연구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특히 우리의 경우는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자체의 목적 때문에 한 것

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업 활용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초과학의 연구결과는 선진국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응용기술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해 온 그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단한 제조업 부분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추격형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선진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우리 자동차나 조선이나 제철은 세계 제일의 이와 같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초과학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에다 우리의 기술을 더해 가지고 퓨전을 시켜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지만 기초과학에만 투자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경우는 주어진 이와 같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알고 2012년까지 35%로 증액을 하겠다, 기초·원천 연구에 전체적으로 50%를 배분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대통령의 철학과 정반대신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반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기초과학 연구를 기초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면 기초과학을 통해서 습득한 것보다는 기초과학은 외국에 의존을 거의 하고 그 과정에서 습득된 생산기술을 우리가 더 발전시킴으로써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전 모형이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2만 불이 넘어가면 원천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기초연구에 많은 돈을 쏟아 붓습니다.

기업은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원천기술을 우리가 갖

고 있다면 굉장히 좋지요. 또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더러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될 때에는 기초과학에 투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원천기술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가장 적은 기술 비용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제조업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컨트롤 타워 문제는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게 보통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그것을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게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또 그것 제품화하는 데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상품화하는 데 또 그렇게 걸립니다. 마케팅하는 데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그것을 효과를 얻겠다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또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OECD가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30개 국가 중 빈곤 인구가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 앞에서 빈곤층은 확대되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국민들은 시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조 슈퍼추경으로 GDP 2%를 끌어올린다고 야단법석이지만 인적 자원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릴 유일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과학에 투자한 추경은 불과 3.5%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교육과 과학에 대하여 생각 자체가 없는 정부이며 추경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기 침체 때 제1차 추경에서 과학에 15%를 편성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에 끊

임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스웨덴도 IMF 위기 때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만큼은 결코 줄이지 않았다고 위기 극복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가 위기일수록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극화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 빈곤을 대물림함으로써 아이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사회 잠재 갈등 요인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고사, 수능 정보 공개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국가의 책임과 재원으로 보장받게 하는 가칭 ‘국가교육기회균등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 차원의 법률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가칭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황영철 의원 소개로 강원 홍천군황성군 지역구민 서른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1년 전을 회고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감동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 국민적 영웅들의 성공의 순간을 보며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감동의 순간은 정확히 1년 전 당선이 확정되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당선을 위해 애써 주었던 가족과 동지들 앞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는 아쉬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어 보기도 하지만 가슴속엔 항상 그 소중한 약속을 지켜가려는 뜨거움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만 25살 기초의원에서 시작해 참 오랜 기간의 배움의 과정을 거쳐 그토록 바라 왔던 국회의원이 되었고, 첫 대정부질문을 하는 지금 이 자리도 그 소중한 약속을 실천해 가는 뜻 깊은 과정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1년이 벌써 됐네요.

(방청석을 보며)

여러분 홍천에서 잘 오셨습니다.

○황영철 의원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바 위얼굴과도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고향 강원도 농촌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이제는 일국의 총리가 되신 한승수 총리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스승과 제자가 담론을 나누는 것처럼 국정을 함께 걱정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시고, 또 곤혹스러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5일간의 국정질문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으로서는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께 벌써 당선되신 지가 1년이 돼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동안에 1년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고, 정말 사심 없이 성심성의껏 대통령을 보좌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풀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특히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많이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벚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총리님 보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 벚꽃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국회 주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오늘 끝나고 나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끝나게 해 주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웃음)

○황영철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궁화꽃입니다.

어느 나라의 가로수로 세워진 무궁화 나무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렇듯 외국에서는 무궁화를 가로수로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와는 달리 흐드러진 무궁화 가로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문화브랜드로서의 무궁화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무궁화꽃은 우리나라의 꽃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강원도 홍천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남궁억 선생께서 무궁화를 기르셨고, 지금도 ‘홍천’ 그러면 무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무궁화 선양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궁화를 정말로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 선양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좀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많이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관련해서 무궁화의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무궁화축제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더 널리 홍보하고, 또 생활용품 같은 것이 무궁화와 연계된 것들도 개발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무궁화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영철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무궁화 선양사업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무궁화 선양사업 예산을 보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1년에 2500만 원, 그리고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라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 무궁화 디자인 공모에 1억 5000만 원씩 격년차로 예산을 세워서 디자인을 공모해 왔습니다. 이것이 행안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궁화 선양사업의 전부인 것입니다.

산림청을 보겠습니다.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 애써야 될 산림청에서는 시장친화형 무궁화사랑 운동, 무궁화 문화포럼 창립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998년까지 4명이었던 무궁화를 전문으로 하는 임업연구사가 4명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1명으로 축소되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를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이 이 정도로서 충분하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나라에 피어 있는 무궁화나무를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께서 처음 보여 주었습니다마는 저도 한 30~40년 전에 루마니아에 갔을 때 흑해 연안의 루마니아 넵툼이라는 도시가 무궁화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궁화에 대한 보급이 좀 더 철저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영철 의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최병암이라는 과장이 있습니다. 중간직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무궁화 브랜드사업 선진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를 봤을 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제 무궁화를 국가브랜드로 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무궁화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무궁화연구소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무궁화를 연구하도록 하겠는데 만일 이것이 사업이 더 팽창한다고 그러면 무궁화연구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의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8년까지 4

명이었습니다만 이제 1명만이 무궁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무궁화가 국민들 가까이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벚꽃에는 가까이 가지만 과연 무궁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부 각료들 당연히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가 3·1절 90주년 되는 해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을 때 무궁화에 대한 사랑이 우리 선조들에서는 대단했는데 지금 나라를 찾고 나서 우리 국화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은 중요한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황영철 의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각 부처별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고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여성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각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 이것이 산만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앞으로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소위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14만 가정이 돼 있고, 우리 결혼의 매년 12%가 국제결혼이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

세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다문화가정이 될 테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출생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같은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고 호남과 영남지방을 돌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사실은 다음 주에는 모범적인 다문화가족들을 총리공관에 초청을 해서 제가 오찬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여러 정부부처에서 갈라져 가지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종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실에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의원** 예, 총리께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은 다원적 분산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가칭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화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을 만들게 되면 대통령 직속이라기보다는 총리실에 두어서 직접 총리가 각 부처 간에 여러 가지로 다기화된 기능들을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하려다가 세 번째로 좀 바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철학이 없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독선과 오만을 넘어 무능, 무소신, 무책임 등 참담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바로 며칠 전에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발언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심대평 의원님은 제가 평소에 항상 존경을 하고 또 우수한 행정 관료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거목 중의 한 분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명박 정부를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신 건 본뜻이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황영철 의원** 무슨 이유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충 짐작은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황영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추진정책이 정쟁 사안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20일 재석 17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4인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까지 토지보상, 광역건설비, 공공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이 국고 5724억 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사업비 5조 600억 원, 약 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잘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나라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것이 이제 와서 다시 재검토되고 폐지되는 논란 속에 싸여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이.

○**황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믿고 세종시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충청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가사업이 정권에 의해서 바뀌어지거나 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가 철학을 갖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저는 이런 사업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잘 추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만 동료 의원들께서 소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 이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인 것처럼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입장, 충청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설득력 있게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촌에 자주 가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자주 갑니다.

○**황영철 의원** 농촌에 있는 학교도 자주 방문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방문합니다.

○**황영철 의원**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느끼시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을 봤습니다.

○**황영철 의원** 저는 제 아이가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제 아이뿐만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지요.

무슨 사진 같으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사진처럼 보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들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무슨 사진 같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수능시험 보는……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마치 수능시험을 수학여행 가듯이 떠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홈경기와 어웨이경기의 성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학생들은 어려운 농촌에서 공부하면서도 결국 정작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원정 수능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

다.

교육부에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백데이터를 통해서 생성한 자료를 보면,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지요.

원정 수능 현황입니다.

경기도가 아직도 29개 군 중에 9개 군, 강원도가 18개 군 중에 8개 군, 전라남도는 22개 군 중에 14개 군, 경상북도는 23개 군 중에 12개 군 등 전체 153곳 중 64곳, 약 41.8%가 지금도 수능 전날 학교에서 수능 출정식을 갖고 미리 이동해 고사장 인근에서 숙박을 하거나 당일 새벽에 모여서 미리 준비된 관광버스를 타고 시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황영철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보고를 받았 습니다.

○**황영철 의원** 보고받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보고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목격하지 못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언제까지 바꾸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당장 이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소요비용, 2009년입니다, 금년도 소요비용 280억 원 중에 30억 원의 부족분을 지방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이것을 수행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수능시험 예산을 전부 본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장 증설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못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지요, 해야지요.

○**황영철 의원** 아주 오랫동안 이런 고질적 병폐가 있어 왔고 그리고 조금 빠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도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면서 정말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서 정말 체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다이야기 잘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바다이야기 수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 당시에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어떻게 끝났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래서 상당한 인원을 사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그 상당한 인원 중에 몸통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글썄, 몸통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로서는 당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제가 파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나라를 발각 뒤집어 놓은 사건인 사형성 게임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2006년 8월 20일부터 2007년 2월 23일까지 무려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153명을 사법처리했고 1377억 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얼핏 숫자만 보면 수사의 성과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처리한 153명 가운데 116명이 업자이고 나머지도 경찰관, 의원보좌관, 브로커 등 의혹의 몸통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

원과 청와대 관련자 등 정관계 실세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정동채 전 장관 등 여섯 명의 문화관광부 공무원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면죄부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 지금 세간에 부패 고리로 밝혀진 연철호 씨, 그리고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오해를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에 대해서도 의심을 두는 목소리가 당시 정치권과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검찰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바다이야기 수사를 재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또는 단서가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못다한 질문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지의 따스함과 향기로운 꽃 내음이 몸과 마음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당선의 영광 속에 지역주민과 국민 앞에 드렸던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치도 국민의 가슴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 줘야 합니다.

야당을 배려하는 여당, 집권당의 국정 책임을 지켜 주는 야당, 그리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부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감동의 정치 드라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동 드라마의 주역, 감동 드라마의 영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을동 의원 소개로 친박연대 당원 열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입니다.

18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 때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정치권은 떨고 있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윤리 문제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흔들리고 도덕불감증은 이미 만연해 있으며 정치권 곳곳에서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내내 청렴함을 내세웠고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내동댕이치면서 깨끗한 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부패한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부정부패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권에 오물을 쏟아 붓고 의원직을 내놓았던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김두환 의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오물이라도 끼었고 싶은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사건 역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현 정부는 실용, 실용주의만 찾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올바른 정신 무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익이 그리고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진정한 사회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확실한 국가관과 정신이 바로 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망하지 않아야 하며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정부가 반드시 지키고 후세에 전해야 할 국가존립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만연된 부정부패와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교육 그리고 잘못된 문화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의 첫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가 지난 2003년 4월 변호사 개업 당시에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한 5억 4000만 원은 이종찬 전 수석의 동생인 이종진 씨가 박 회장한테 차용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이종진 씨가 박 회장으로 부터 투자금을 받은 시기였던 2003년 3월은 이종찬 전 수석이 검찰에서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총리께서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연차 회장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총리도 이것을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박 회장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전 수석에게 사실상의 로비대금인 사무실 보증금을 편법으로 주었지만 정권이 교체된 작년 2월에 이종찬 씨가 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차용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자까지 붙여서 박 회장에게 되돌려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 7월에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사 회장과 이 전 수석이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서 구속되

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만 증폭시킬 뿐 검찰수사가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 검찰이 현 정권 실세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데 무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박연차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검찰 수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모든 분들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결과가 빨리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돈을 만약에 받았다면 명명백백하게 그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조국에서 전쟁이 나면 즉각 전투에 임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싸우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한국 청소년은 10.2%인데 비해서 일본 청소년은 41.1%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론은 분열된 지가 오래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일부 신종 매국노에 의해서 왜곡되는 등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격하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기존의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할 배경이 무엇이며 또 격하시켜서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부처의 일부는 통폐

합을 했고 일부는 또 이와 같이—국가보훈처가 대표입니다마는 또 법제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지위를 기존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약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의 기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기능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가유공자의 예우라든가 보상, 민족정기의 선양 등 국가보훈처의 주요한 기능은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처의 가족들의 사기 저하를 시켰는데요. 지금 작은 정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이 라든가 그대로 있고요, 또 국가보훈처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되면서 약 한 100여 만 원의 월급만 줄어드는 결과뿐이지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작은 정부’의 이런 역할 때문에 오히려 보훈가족들의 사기만 저하된 그러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대군인부가 우리나라 보훈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944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썼습니다. 물론 제대군인부를 총괄하는 수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책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야 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제 작고 효율적인 이와 같은 정부의 기조 위에서 1년 전에 조직을 간소화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통폐합을 다시 원상복귀하고 차관급으로 했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시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보훈가족이라든가 선열들에 대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존경심을 이 보훈처가 모아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고 지금 보훈처장도 훌륭한 분으로 보임이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가지고 좀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격려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격하가 됐는데요, 국가보훈처의 업무는 대폭 늘어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을동 의원** 다음 또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사 교육은 그 어느 교육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국사 교육이야말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의원** 그렇다면 10여 년 전부터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육시간 줄었고 국사 과목은 각종 국가시험에서 철저히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 나오면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 전형요소로 하고 있는 대학이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단 한 군데고요,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공립대조차 모두 국사를 선택전형하거나 아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선발시험에서조차 어느 학교도 국사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국사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과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험과목도 시험과목입니다마는 학교에서 국사 교육을 좀 더 열심히 시키도록 해야겠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우리 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이와 같은 기술을 하는 역사 교과서는 많이 정정을 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의원** 한 나라의 존속과 흥망은 교육에 의해서 대대손손 이루어집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않는다는 말처럼 국사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속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동감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을동 의원** 그래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여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잘 듣고 있으니까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문화관광체육부는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라는 책자 3만 부를 발간했습니다.

총리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을동 의원** 그런데 총리님도 지난해가 건국 60주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일부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러기 때문에 90년이 돼야지 왜, 올해가 89년이 돼야지 왜 60년이나’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선열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지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인정이 되고 한 것은 1948년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수립이……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 법통은 임시정부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국이라면 하여튼 우리의 헌법정신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만약에 1948년이 건국 60주년임을 정부가 공식화할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민족단체들 역시 이에 대해서 크나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서 지난해 11월 이 책자를 전량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수거가 굉장히 미진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대한 회수 의지가 있는지, 그 책자에 기술된 내용이 내심 현 정부의 역사 인식과 같기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본 의원의 역사 인식에 공감하고 계시다면 이 지적한 내용에 대

해서 처리 결과를 추후에 국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총리께서는 문화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문화의 업적을 기리는 이와 같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을동 의원 문화재라는 것은 민족혼이 깃든 민족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963년 정부가 사적 101호로 지정한 삼전도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도비는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항복시킨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공적비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의 산물을 조선조 말 고종은 부끄러운 역사라 해서 강물에 빠트렸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1913년에 이 비석을 다시 찾아내서 세워서 적극 보호합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치욕의 역사인 이 비석을 찾아내서 전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당시의 일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쁘게 한국의, 우리 조국의 선조들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받도록 역사에서 하려고 만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을동 의원 우리 민족에게 굴욕의 역사가 있었음을 교육하고 또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강제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해방 후에 지역주민들이 이 비석을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대홍수로 인해서 재발견되자 정부는 치욕의 역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역사적 치욕이 담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다못해 일제 때 군인들이 숨어서 싸우던 제주도 동굴진지까지도 지금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그러한 상황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제가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백두대간에다가 쇠말뚝 박은 것 이런 것도 문화재로 등록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 원칙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처럼, 김을동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욕의 역사가 깃들어진 그런 물체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조들이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자고 하는 그런 양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고유문화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문화재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의 지정 원칙과 범위 및 용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보존과 관리·감독에 구분을 두어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다음으로 중앙청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에 따른 옛 서울시청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 당시에 총괄했던 서울시청은 계속 지금 문화재로 보존해서 허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점기에 경성부청 건물로서 식민통치의 시작이자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이거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서울시청 해체·보수 공사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제 잔재의 서울시청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분만 보존을 해 가지고 아마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대부분 도서관이나 시민들의 문화공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런데 그 경관을 한번 보십시

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일제의 시청 건물이, 저기 지금 현재 서울 시청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서울시청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청을 놔두고 서울시청을 건립 하는데 모양이 저렇습니다. 국가 상징거리에 일제 잔재물이 저렇게 있으면서 저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일본은 이미 동경시청을 건립하면서 다 없었습니다. 저걸 저대로 존치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화재적인 가치도 없고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쭙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연예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악플에 의한, 연예인의 불평등계약에 의해서 잇따른 사건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비롯한 대중문화가 그동안 정부정책의 시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대중문화의 진흥을 감독하는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전담부서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중문화가 한류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외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홍보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예,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며 정신을 올곧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순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님, 동료·선후배 의원, 국무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에 사랑을 담아 희망을 만들어 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명순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위기로 사업이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되어 갈 곳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숙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원당에 있는 정부 지원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제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50%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IMF 때 사업 실패하고 회사가 망했다 또는 부채, 경제적인 이유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물었더니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일했던 직장 또 먹고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100만 원만 있어도 질병도 고치고 방한 칸 마련해서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고 새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숙자나 알코올중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신나는조합을 통해서 마이크로크레딧 초기사업을 할 때는 알코올중독자나 노숙자, 귀농인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참여정부에서 20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제한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MB 정부에서 2009년도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서민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중소·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또 금융위원회 등에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이크로크레딧의 복지부만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0억에서 올해 130억으로 또 추경에 한 200억이 더 추가되면 한 330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런데 현재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정부의 저소득층 창업 자금 지원사업으로는 복지부에 마이크로크레딧이 있고요, 또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고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 있고 또 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각 사업들에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리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강명순 의원**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크레딧은 담보 없이 무보증·무담보지만 다른 사업들은 담보를 제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들이 공통적으로 보증이나 담보물 제시를 요구하는데 집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알코올중독자나 노숙자라고 하면 누가 보증을 해 주고 담보를 빌려주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실제 마이크로크레딧 복지부 사업이 무담보일 뿐만 아니라 소액서민금융재단,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무담보고요. 장기실직자의 경우도 노동부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무담보는 마이크로크레딧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추경에서 200억을 해도 어렵습니다. 인프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기 어렵고요.

또 각 부처별로 나뉜 이 방법들을 보완하고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통합해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빈곤퇴치사업을 정책 우선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하여튼 여러 부처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마이크로크레딧 류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한 부처에서 하기는 힘들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정이 돼서 누수현상이

있다가 중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러면 혹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마이크로크레딧인지?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아주 소액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500만 원 정도라든가 10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명순 의원** 돈만 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강명순 의원** 돈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서, 가난한 사람들, 자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빈곤 퇴치할 수 있는 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해 주는 그것이 마이크로크레딧이고 신용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민간이나 정부에서 지원금만, 돈 주는 것만 받는, 물고기 먹기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마이크로크레딧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여러 나라에서 하겠습니까만 가장 유명한 곳은 노벨상도 받은 분이 있는 방글라데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명순 의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110개국, 자료화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110개국에서 2007년도 통계에 1억 5500명이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1995년에 185개국 정부관료와 117개국 대통령과 총리들이 코펜하겐에서 세계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 빈곤퇴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채택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정부에 있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총리님 이름이 안 계셔서 안 참석하신 줄 알았는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고 대통령님만 다녀오셨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두 번째 공약, 무엇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 공약이 구체적으로 빈곤퇴치였는가요?

○**강명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단호한 국가적 조치 및 국제협력을 통해서 인류의 도덕적·정치적·경제적 당위과제로서 빈곤퇴치를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다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실천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 다 하셨고요, 부총리, 유엔총회 의장님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이 빈곤퇴치 선언을 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참석 후에 빈곤아동 0%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수당증을 제공하고 슈어 스타트(Sure Start) 사업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동안 세계 사람들과 약속했던 것이 이행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95년에 한 것이 아니고 2000년에 새 천년 개발목표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제의를 해 가지고 작년이 꼭 반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것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최근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위기도 극복해야지만 후진국 지원을 1조 달러 정도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순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총리님께서 마지막으로, 재임기간 마지막으로 한번 빈곤퇴치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국내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할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을 시대가 됐고 해서 ODA를 사실은 올해보다 2015년에 3배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국내에 있는 빈곤퇴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저는 2020년도까지 빈곤아동, 결

식아동 한 명도 없는 나라 만들기 ‘빈나 2020 운동’을 2005년도부터 제창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빈곤퇴치라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만큼 일자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아동복지예산의 증가라든지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충 또 지난 5년 동안 현실지원이 차단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확실한 현실적 지원, 알코올중독자나 노숙자, 사각지대 빈민·농민·어민과 예산대책 없이 지방으로 이양된 4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 이제 IMF 이후에 급증하는 빈곤층을 위해서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게 10년 동안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다시 앞서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빈곤퇴치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총리님의 총책임 아래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사실 개인당 소득이 2만 불이 거의 되고, 최근에 환율 때문에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세계 13위 대국으로서 그러한 나라에 빈곤층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강명순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앞으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빈곤층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용산 사건으로 숨겨간 세입자들과 경찰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조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 및 재정비 촉진지구,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관계는 아마 우리 국토해양부장관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명순 의원** 오늘 안 오셔서 제가……

○**국무총리 한승수** 차관이 나오지 않았나요?

○**강명순 의원** 오늘 안 오시는 날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오늘 안 나왔네요.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구해 가지고 보고……

○**강명순 의원** 지금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말 현재 전국에 재정비 촉진지구는 69개 지구이고, 서울에만 2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원주민 정착률이 20% 미만인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그 통계수치를 기억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강명순 의원** 그렇습니다. 20%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통계는 모르시지만 나머지 80%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서울에서 쫓겨나면?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분들이 가실……

○**강명순 의원** 변두리로 갔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변두리로 간다든가……

○**강명순 의원** 경기도나 충청도 뭐 무허가 비닐 하우스나 쪽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목동아파트 생기기 전에 거기서 어떤 모습을 이루고 살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도 조그만 동네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명순 의원** 전기가 없고 수도도 없고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민들이 살면서 전기·수도·버스가 들어오고 지금은 아주 서울의 중심, 방송국이 생기고 아파트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형성될 때 1977년도에 목동 철거주민의 호소문이 ‘아파트도 싫다. 보상도 싫다. 나는 목동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분들은 내쫓기고 이렇게 다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이 원주민들이 물질적으로, 비물질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단 목동이나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이만큼까지 발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래서 이 원주민과 개발 이익을 노리는 전입세대를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도시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의 수고와 권리를 인정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리고 철거지역에서 제가 28년 전에, 사당3동 철거 시에, 1981년 철거 시에 할머니가 호소하는 호소문과 2008년 6월, 28년이 지난 6월에 강북구청 미향마을 철거민 호소문을 화면으로 올려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7년 전, 81년에 사당동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대체 어느 놈의 땅이냐. 등 허리가 휘어지고 이 늙은 몸이 온몸을 땀으로 목욕하고, 이 일 하고 나면 내 집이 생긴다는 희망으로 공사장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빨을 딱 물고 생피내며 모아놓은 돈인데 이 엄동설한에 이 돈은 고사하고 1원도 안 주고 무작정 나가라면 10만 원에 1만 원~1만 5000원 셋방 사는 우리 같은 사람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8년도 6월에는요, 비 오는 날 아침 8시 30분에 미향마을 어르신들이 쫓겨나서, 용역깡패들한테 쫓겨났습니다. 마을 앞길에서, 50년 동안 살았던 집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포크레인 찍어 내리는 그 집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고 ‘내 혈압약, 내 이빨, 내 집’하고 통곡하면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지내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28년 동안 빈곤 철거 상황에 변함이 없습니다. 철거깡패는 여전히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악천후, 비올 때나 야간에 퇴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도 올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겨울철이나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에 강제 퇴거는 금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예, 그래서 강제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만들어 주시고요. 또 물론 동절기, 악천후나 야간에 진행되는 강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또 불법용역 철거깡패들이 투입되어서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강명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많이 도산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고 학벌도 없고 경영수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사업 준다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뒷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강명순 의원 예, 우리 지금 빈곤층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돈 쥐서 너희들이 성공하라 하면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경제적인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나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어렵겠지요.

○강명순 의원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리고 또 저희 노동부로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도와드리기는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좀 일자리, 가난한 사람이 일자리 만들어 창업자금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기 실업자로, 만일 구직 등록한 후에 가령 6개월 이상된 여성가장이라든가 실직 고령자에게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다면 최고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최장 6년간 저리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업을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취약한 분들을 채용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창업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강명순 의원 가난한 사람들이 창업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보완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들 또 기부금 인정하는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겠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물론입니다.

○강명순 의원 저는요, 매일 여성들의 눈물을 만납니다. 직장이 없고 비정규직이고 돈도 없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죽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발표된 OECD 통계연보에 보니까 한국 여성 자살률이 2007년도에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 2배에 달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제가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가정적인 불화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비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명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 너무 힘들습니다. 이 모든 노동의 여건이 좀 변화가 되면, MB 정부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고용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그 부분을 바로 그냥 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를 하고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특히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일자리를 더 나은 데로 옮겨가기 위한 훈련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취약 여성분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예, 여성 자살률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강명순 의원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3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86만 명에게 6개월간 공공근로 실시하고 6개월 동안 현금, 상품권 지원할 계획 발표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예, 화면을 보시면 기재부가 제출한 08년 가계생계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식료품비, 의류비, 집기류 지출이 36.4% 수준입니다. 그러면 50%에, 상품권을 지불하면 약간의 여분이 남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면 상품권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명순 의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강명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주로 현금으로 빚을 진 경우도 많고 학비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를 강제로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에 소진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분들의 수요를, 필요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여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명순 의원** 이렇게 돈을 83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중복될지 안 될지, 또 6개월 후에 지원 끊어지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복지부와 의논하셔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체계나 사례관리 체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와 의논해서 사업 보완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것은 우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한시적으로 생계가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최소한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서 사업의 성과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례관리자들이 이분들을, 통합적으로 생계가 진행되는 것을 도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월 6일 광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 방송 인터뷰하시면서 ‘방과 후 학교 규제를 풀어서 학원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영리기관에 위탁해서 국어 영어 수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 어떤 의도로 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 제가 직접

들어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취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많이 경감시키자 하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명순 의원** 장관님, 참여정부에서 했던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지금 왕따도 당하고 아주 외롭고 힘들고 또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엄마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숙제 지도나 특기 적성에 일관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방과 후 학교는 학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특히 학년이 낮아질수록 돌봄의 뜻이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명순 의원** 저는 35년 동안 빈민 쪽에서 일했지만 방과 후 학교는 참여정부 최고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으로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체험이나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 지도나 특기 적성만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문희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통합적인 아동들에 대한, 빈곤아동에 대한 것을 하라고 부탁을 해도 실적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MB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을 지속하려고 하는 방과 후 사업 계속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방과후 학교는 교육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수업에서 미처 못한 것, 그런 부분도 채우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러한 돌봄의 의미도 또 강조하고 그래서 양면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순 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방과후에서는 다른 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보다 2배, 3배 이상의 예산을 들이면서 실적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알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그래서 이제 학교시설 개방해서 1318세대 전용,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결식아동 급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역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교 급식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순 의원** 학교 중단 청소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면 학교 중단 아동의 범죄 노출이 훨씬 더,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동들에 대한 자료도 좀 나누어 주셔서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예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복지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순 의원** 그러면 학교사회복지사사업이나 교과부 시범사업에서 중단됐던 것, 학교사회복지사사업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여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상담치료 쉼터, 있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현재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입소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비율, 전체의 62%가 지금 수용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지부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쉼터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전문 쉼터는 따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관만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쉼터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쉼터는 없습니다.

○**강명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피해 아동들이, 피해 신고가 1만 7000명 이상이고요, 가해 아동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자료화면에 보시면 성폭행 하는 아이들이 2001년, 2002년, 2009년도까지 계속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순 의원** 정부에서 쉼터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부장관 변도윤** 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그 시설을 준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에서 보면 성폭력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시급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지난 4년간 아무리 요청해도 정부에서 아동들을 위한 쉼터, 하지 않았습니다. 꼭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복지부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 과도로 심각해진 경제 살리기 과제는 경제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빈곤 퇴치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곤 퇴치는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안입니다.

추경을 위해서 국채 발행도 하겠지만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조절하고 줄줄 새는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고 사우나를 하고 근무수당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눈에 불을 켜고 혈세 지키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와 국회도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분수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배관시설을 다 마친 곳에 지난 17대 국회 끝날 무렵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아주 흉물스런 남근석을 세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앞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새겨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뒤에는 페니스와 고환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 그대로 두겠습니까? 참으로 창피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아이들이 오는 이 국회, 이 전당에서, 민원인이 오는 이 전당에서 이런 것들도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들의 호소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법부나 국회나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 나라를 살리는 일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강명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입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우리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장애나 노화는 인간이면 누구나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한 번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박은수 의원** 인간은 누구나 늙으면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보통 사람도 임신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게 되면 그 순간은 장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501만 명을 넘어서서 총 인구의 10.3%에 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770만 명,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의 숫자가 물경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 투자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SOC에 투자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장하준 교수나 촛스키 같은 세계적 석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버냉키 의장조차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재정 정책은 단기적 효과만 누릴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 이후의 사회적 과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OC 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처방은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는 타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9년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SOC 투자보다는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방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는 못사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돈을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디자인에 입각한 제품들과 주거환경입니다. 이러한 장애·노화라는 보편적 현상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 보편적 디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총리님, 이 화면도 한번 봐 주시지요.

일례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휠체어건 유모차건 짐수레건 그 누구나가 쉽게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보통의 에스컬레이터는 휠체어·유모차·짐수레를 배제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든 이러한 에스컬레이터는 누구라도 쉽게 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이나 차, 도로,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대전시 청사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제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주 전적으로 의견에 동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경제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지금까지 했던 투자 형태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수 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이어서 보시는 사진들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우리나라의 보행 환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SOC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의 이익 위주의 투자보다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소중한 국가의 재정을 투자해서 사회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꾀하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시급하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단기적 안목에서 당장의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투자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강화하고 위기 극복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지 투자 내지는 복지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우선적이고 SOC 투자라 하더라도 복지적인 관점이 포함이 된 SOC 투자가 현실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존경하는 박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에 관해서 SOC 투자

를 할 때에 더 투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의견에는 아주 동감이고요. 앞으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문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이나 국가의 상징적 존재가 되는 황실 그리고 왕실에서 장애인정책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일본 천황과 황태자 그리고 영국 총리와 왕실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을 최우선적 국가 정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국민적 지도자인 등소평의 장남이 8000만이 넘는 중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장애인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세계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7800억 달러 긴급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인 교육 분야에만 1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14개월 동안 장애인 관련 행사를 찾은 바도 없으며 장애인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도 거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100대 정부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라는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지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말씀하시고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총리님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짧

게 언급한 것, 그리고 작년 장애인의 날은 참석은 하지 아니하시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유일합니다. 그것 겨우 찾았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러한 지적을 꼭 전해 주시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황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동안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2% 의무고용조차 지키지 못하던 것을 반성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장애인 할당률을 5%로 인상하여 5년 동안 장애인을 800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현재는 약 1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공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의무직종 제외 영역을 대폭 축소해서 2007년도에는 202명의 장애인 교사가 탄생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정부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인상하는 법 개정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에 부응해서 POSCO,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7대 국회는 대기업들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더욱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특례자회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기업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제1호 사례로 POSCO가 포스위드를 설립하여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직접 참석하셔서 보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봤습니다.

○박은수 의원 이처럼 대기업이 스스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는 정말 몇 십 년이 걸린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장관, 어떻습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식

지 않고, 여기서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일구어낸 그런 소중한 기회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식어버릴까 본 의원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적극 앞장서 주시고,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언급을 해 준다든지 관심을 가져 준다면 모처럼의 이런 대기업의 태도 전환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극 앞장서시고 대통령께도 건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POSCO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고용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종업원 226명 중에서 97명, 42%가 여러 경우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한 200개가 넘는 기업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4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그런 POSCO의 아주 좋은 기업의 사례가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로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POSCO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크게 우리나라에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저의 경험으로도 정말 우리 온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모아 주어야 하고, 장관님의 힘만으로도 조금 저는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점은 직접 나서서 챙겨 주시도록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또한 제도적으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제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기업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만, 다만 사회적 기업이 될 경우에는 기업이윤의 3분지 2를 사회적 목적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목적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또 사업을 위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스스로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 장애를 가졌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사회는 정말로 후진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일하는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기에 이것이 바로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박은수 의원 다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의 약속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그동안 여성부가 해 오던 성차별 시정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맡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부와 여성계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차별의 권리구제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인권위원회입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별도의 조직 신설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서 기존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정부 측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 6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오랜 협상 끝에 필요 최소인원으로 20명의 인력 증원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역사적 과정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약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깰수리 무시한 것이 인권위 축소의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박은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권위원회 개편은 그동안에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

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 낭비요소를 대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지금 감원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사무소의 경우는 그것을 줄이려고 하다가 장애인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감축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결코 이것이 인권위원회의 기능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기능을 줄이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방만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그것이 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와의 약속입니다. 정부가 직접 한 약속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약속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화, 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현재도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수 의원 미국 ADA, 미국의 장애인차별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세계사적 방향성입니다.

총리,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선진화입니까,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선진화이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와 같은 추세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따라가는 것이 선진화의 길입니다.

○박은수 의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자 진정한 선진화라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은 장애인 의 무고용률의 인상,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 등 장애인 정책에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부의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 데, 이런 소중한 성과인 장애인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사회 전체의 투자비용과 관심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반실용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우리 사회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고양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실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수포로 돌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실용적이겠습니까?

한 평생을 장애인 권익증진 운동에 애를 써 온 본 의원으로서 이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동안 결코 쉽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피땀과 시간이 걸렸는지.

따라서 본 의원은 “쇠가 달아올랐을 때에 치라”는 속담대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 정부가 외면하지 마시고 불씨를 살려나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쇠가 달았을 때 물을 끼얹어서 허무하게 만드는 쪽보다는 달았을 때 바로 침으로써 어떤 명검을 만든다는 자세로 총리 재임 기간 동안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이 많이 필요한 활동 보조 서비스라든가 장애 아동 재활 치료 확대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류 선진국가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은 복지 여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결코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전진한다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간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약 9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결코 교육에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편의시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SOC에 50조를 투자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복지SOC 예산 9400억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견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빨리 최대한 조기 집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 교육기회 제공 등 관련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총리님, 오늘 이 점에 관해서 한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일 적발되어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복지 투자가 결코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는 좋은 것이고,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복지는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었을 때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젊고 건강한 한 순간만 행복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늙고 병들거나 장애를 가져도 같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행복한 그런 곳이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박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어린 신음과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공직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큰 실망을 주어도 공직자들이 아무리 허튼 짓을 하여도 결국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직자들 외에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창한 공직자의 윤리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세비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사람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과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섬김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자세, 즉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께서는 보이스 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 전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준선 의원** 본 의원은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고 제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2년 반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은 1만 3083건, 피해액은 1330억 원에 이릅니다. 2006년도부터 매년 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박준선 의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주로 노약자층,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서 등록금을 전부 잃고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또한 법원, 경찰, 우체국 등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꾸미는 등 낱알이 범죄의 수법이 새로워지고, 피해자 중에는 법관, 경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박준선 의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피해를 신고해도 범죄가 대부분 중국 등 외국에서 벌어지고 전화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신고받는 것조차도 꺼리고 있습니다.

분명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를 신고해도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전화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책추진단을 총리실과 경찰청,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제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지금도 그 단속기간에 들어 있습니다마는—검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준선 의원님께서 많이 파악을 해 주셨는데, 중국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이 6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전화사기범을 313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과 협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본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과 피해 규모에 비해서 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인터폴 공조수사,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조 등 매우 느긋한 형태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협약을 새로이 맺어서 중국과 신속한 전화 추적과 신속한 범인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당장으로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수취계좌의 인출이 정지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 국가와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협약을 맺어서 문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지금 범죄가 점점 글로벌화되고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수사라든가 범인 검거 방식은 과거의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박준선 의원** 그리고 외국과 이런 보이스포싱의 범죄 유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즉각 피해자에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피해가 생겼을 때 본인이 파악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나 제3의 기관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에게 알려 주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금감원 같은 데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 문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 공조와 조급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그런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강하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범죄는 매년 배 가까이 늘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의 조치가 느리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정부는 범죄와 같은 속도로 또는 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박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참 시끄러운 박연차 관련 금품로비 의혹 사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만, 박연차 사건은 지역의 기업인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 또 공무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제공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단순하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과시욕이나 사업

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품을 살포했고 현 정부 들어서에는 구명을 위해서 금품을 살포한 사건으로 본 의원은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런 양면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 중에서는 ‘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면서 항상 죽은 권력, 즉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서만 강한 면을 보이느냐’는 조소 어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라는 것이 성질상 과거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은폐되었던 여러 가지 범죄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검찰이 소위 살아 있는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수사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의원** 2004년도 대선자금 수사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박준선 의원** 당시에 검찰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 수사보다는 이회창 당시 낙선자 측에 대한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습시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 검사의 의지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 의지가 약해지고 위축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관련자들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연차 사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검찰은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박연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10배, 100배 강도 높게 하고, 그리고 결과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은 전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당장은 도덕적인 상처를 다소 입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도덕적으

로 깨끗한 가운데 국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선 의원** 아울러 장관께서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단단히 막아 주시고, 아울러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검찰이 살아 있고 정의가 살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수사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가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박준선 의원** 장관께서도 2004년 3월 고 남상국 사장이 어떤 경위로 한강에 투신했고, 11일 만에 시신을 찾았던 당시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의원** 우리 국민들도 그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 남상국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촌로에게 찾아가 연임 청탁을 하면서 돈을 안긴 것처럼 공개적으로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느낀 남상국 사장은 결국 자살의 길을 선택했고 노건평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와 같이 노건평은 순진한 촌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거액의 검은 뒷거래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남상국 사장의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 연임을 미끼로 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다, 즉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공갈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고 남상국 사장의 유가족들의 사무친 한을 풀어 준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엄정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준선 의원** 특히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이었던 노건평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실관계가 노건평에게 유리하고 고 남상국 사장에게 불리하게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안녕하십니까?

○**박준선 의원** 영어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전체 규모가 21조가량 된답니다.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준선 의원** 그중에서도 2007년 대비 영어 과목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12%에 달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3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우리의 아이들은 고전을 읽고, 뛰어놀고, 토론하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낯선 땅에 가서 영어공부를 하느라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돼서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파탄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준선 의원** 그 비용이 연간 52억 달러로 자동차를 500만 대를 팔아야 벌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토플 말하기 성적은 161개국 중에서 131위입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심각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준선 의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여타 지역 사람들보다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박준선 의원 저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시스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바로 그런 점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박준선 의원 장관께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왜 애들을 어린 나이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왜 영어학원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여러 가지 통계를 봤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러니까 왜 보내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한국에서 할 때 지금 존경하는 박준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초중고등학생들은 외고를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멀리서는 대학을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게 가장 크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저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수능에서 영어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고 고등학교에서도 영어시험을 폐지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해외 유학을 보내든가 영어 인재를 양성하면 되고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수능 영어를 폐지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6시간씩 영어공부를 즐겁게 하면 왜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수능에서 영어를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외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고가 지금 시험보다는 면접 여타 방법으로, 또 내신 같은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의 영어시험의 폐지 이것은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동감해서 우리도 그 폐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선 의원 그 제도가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제도가……

○박준선 의원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될 수는 없고요, 영어는 영어대로 계속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고등학생들을 위한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수능시험과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대개 2012년쯤 가면 이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영어시험, 수능제도를 그때 교정하든지 또 연기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렇게 해서 기러기 엄마·아빠가 없어지고 사교육이 없어지겠습니까? 영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부터 우리 교육 담당자들이 바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어시험을 봐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먼 미래에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학창시절에 영어공부에 대부분을 쏟았지만 영어 잘 못합니다. 3형식·4형식·5형식 잘해 가지고 무슨 영어를 합니까? 즐겁게 생활에서, 영어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영어는 언어입니다만……

○박준선 의원 언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기관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배정해서 즐겁게 한다면 그 정도의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영어는 대학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꿀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기러기 엄마·아빠를 없애고 영어학원을 없애는,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체육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주에 한 2, 3시간 정도.

○**박준선 의원** 미국에서는 매일 30분씩 합니다, 일본에서는 4시간씩 하고, 어린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와 신체와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함께 준비해야지 나머지 여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체육시간을 배정하고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30분 정도는 체육활동을 하고 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체육에 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부하고 함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2200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해 가지고 교내에서의 체육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교육 얘기를 하고 2020년도 얘기하시는데 당장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지금도 벌써 시작했습니다.

○**박준선 의원** 체육교사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하루에 1시간씩 정도는 놀게 하라는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준선 의원** 애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금년도에 825명이 이미 스포츠강사로 채용됐습니다.

○**박준선 의원** 어린아이들은 나날이 자라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하루가,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 아시지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 잘못된 제도에서 교육받으면 그 시기를 놓칩니다. 애들의 한번 구부러진 허리는 평생 펴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사 피해가 매년 심하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황사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왜냐하면 황사 발원지

에서 황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바람의 힘도 세져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제는 미 대륙까지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준선 의원** 황사 피해가 심한데 우리는 예보만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것이 전부 다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황사 피해와 관련된 대책은 크게 보면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를 막는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작년 3월 달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계획답게 세우고 그리고 5월 달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부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처에서 황사 피해를 다루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나 또는 산업적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 등을 포괄적으로 보는 훈련이 아직은 미흡해서 국민에게 황사피해 방지 대책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안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황사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협력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앞서 지구 문제를 보는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특히 국제기구에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증진하고 몽골 중국 일본과 정례적인 대책모임을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한계 역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여지를 가진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가장 근본적인 황사 대책은 결국 몽골 지방에서 모랫바람이 이쪽으로 안 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부나 몽골 지방의 황사 발원지의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첨경이 되겠습니다.

일부 우리 민간단체나 또는 국제기구 또 정부 대표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발원지에 조립

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착률이 떨어지고 앞으로 거기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거나 또는 특수 수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식재기술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중일 장관회의 또는 몽골과 4국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준선 의원 예, 우리 국민들이 황사 피해 입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일본 중국 몽골과 함께 국제적인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박준선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 주는 것이 행정의 해야 될 제일의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황사 예보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황사가 미치는 영향을 국민생활 각 부문 부문별로 파악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도하는 등의 행정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기술개발과 자본축적 그리고 협력적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다원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예,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가지적으로 나와야지 국민들은 고마워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국민을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법 의무사용기간 2년이 되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의원 몇 명이나 해당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 근로자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실시한 가장 큰 조사는 작년 8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 기간제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263만 명이었는데 그때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9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97만 명이 그대로 있다면 지금은 3년차가 됐을 것이고 그때 2년이 안 된 분들은 지금 2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하면 한 150만 넘어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사이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그중에서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실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고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도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러면 한 80만 가까이 실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다른 간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럴 수 있게 되죠. 그 당사자는 실직당하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의무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의원 2년을 4년으로 늘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완전히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2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제한할 때 실질적으로 보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년이 지난 지금 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해고시키는 법으로 결과적으로는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2년을 고용하고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율이, 저희들이 다른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2년 4개월 되었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율이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 조사가 KDI 조사였습니다. 4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는 율이 63%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고용기간이 조금 길어야 그 근로자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좀 더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간제 고용제를 유지하는 한 합리적인 기간이 뭐냐 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4년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근로자도 자기가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고 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2년 정도의 기간 가지고는, 거기서 일하면서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자기 경력 쌓기도 어렵고 훈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한 4년 정도 일할 수 있으면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기 경력도 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4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4년을 갖다가 설정하게 된 겁니다.

○박준선 의원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의 목소리는 들어 보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저희 노동부에서 한 80여 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권에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것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근로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상당히 갖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무렵에 상당한 부분을 이미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많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100명 이하의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솔직히 기간을 연장해서 고용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철폐해 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을 보다 세분화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진지하게 토론을 할 테니까 장관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 노무현·김대중 정부 시대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16개나 됩니다, 만든 것이. 이것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2008년 4월입니다마는, 과거사위원회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정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모두가 법률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과거사 통폐합 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통과가 되면 이 관계는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준선 의원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되어야지 된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준선 의원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네요, 총리께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로서는 이것이 논의가 국회에서 된다고 그러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뜻하는 탐(貪), 진(瞋), 치(痴)를 일컬어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세 가지의 번뇌를 삼독(三毒)이라고 부릅니다.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는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여 화를 내며 다투는 일이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을 범하지 않도록 늘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박준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 한나라당 임해규입니다.
요즘 국민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임해규 의원** 어제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 사이트에 한해 동영상과 댓글의 업로드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정부의 인터넷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지금 각종 언론을 장악한다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고, 더구나 인터넷 사이버 세계의 언론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고 또 그럴 방법도 실제로 없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유튜브를 차단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전혀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한 바도 없고 할 의도도 없고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해규 의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새롭게 의도된 바가 없습니다.

○**임해규 의원** 사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댓글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인터넷을 사용하자고 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 이 법을 만들고 본인 확인제를 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논평을 했느냐 하면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을 홍보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명제가 된 것은, 본인확인제가 된 것은 사회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1월 26일 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된 법령에 따라서 적용되고 시행이 된 것입니다.

○**임해규 의원**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또 인터넷으로 인한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지만 또한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한적인 그런 확인제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것이 마치 한나라당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명백히 아닌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은 세상이 다, 공지의 사실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정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시행된 것입니다.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임해규 의원**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이 법을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명백하게 확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감사합니다.

○**임해규 의원** 다음은 교육 분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 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 2008년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해규 의원** 1.19명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말하자면 인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 정도의 평균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출산 현상에는 교육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특히 유아 교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단계적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유아 교육계의 요구를 들어서 유치원 종일반비를 새로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지불해 주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만 5세아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의 5세아는 국가가 무상으로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받고 있는 비율은 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제 생각에는 2012년까지 만 5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 무상교육을 하고 만 3, 4세아 차등 교육비도 소득 80%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도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래서 2008

년도 기준으로 해서 만 5세 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2배 이상 늘립니다. 매년 늘려 가지고 결국 2012년에는 모든 5세 유아가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의원** 전원을 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만 5세.

○**임해규 의원** 재정계획도 짜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금년이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6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해규 의원** 3, 4세아 차등 교육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도 역시 저희가 계속 늘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임해규 의원** 제 제안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다음은 보육교육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 시스템 하에 있고 또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이로 인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아주 교육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국정 과제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계에 대해서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통합이 지금 어려운 점은 무엇 때문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과 보육 이 두 분야가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장기간 존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계하고 보육계가 관련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움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는데 그게 통합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는 육아정책개발센터 거기를 통해서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힘듭니다.

○**임해규 의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이 잘 안 되어 오고, 제가 아까 다른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어 보니까 이 통합 노력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인수위 국정 과제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이제는 단순히 유아 교육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의 문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번 이명박 정부 내에 뭔가 좀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보육교육 통합추진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국무총리님께도 여쭙어 봐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과부가 함께하는 그런 통합추진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다음은 중등교육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교과교실제 하면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과교실제가 어떤 제도지요? 이번 추경에 2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금 쓰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실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는, 이동수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과교실입니다.

○**임해규 의원** 사실 우리 초중등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다들 바라는 어떤 제도일 겁니다.

선진국에 가면 우리와 가장 다른 모습이 우리 미술이나 음악 수업 같은 경우는 미술실이나 음악실에 가서 받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역사나 과학이나 거의 모든 과목을 다 해당 과목의 교실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그 과목에 걸맞은 교구도 비치되어 있고 또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에 맞게끔 학생들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훨씬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간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있는 일반적인 학급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형상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간에 바라던 제도인데 마침 이번에 200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으로 2000억을 받게 되면 지방에서 또 대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00억입니다. 그래서 총 4000억으로 교과교실제를 확대하는데요.

우선은 교과교실제를 위해서 교실 증·개축비에 사용하고 또 리모델링비 또 학습기자재 이런 데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해에는 그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로 보면 한 800개 교가 교과교실제 도입의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제가 교과교실제 시행 그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800개를 한다고 그렇게 양을 미리 결정하고 교과교실제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실시할 학교와 부분적으로 몇 개 과목만 할 학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양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가 정말 필요한 곳은,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도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훨씬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또 우선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런데 그런 곳은 대체로 과대학급이고 과밀 학급인, 즉 교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런데 이것을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교과교실제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곳을 찾다 보면 오히려 필요한 곳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곳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잘 세우시고, 그러다 보면 학교를 일부 증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연구에 따르면 한 120%의 교실이 필요하고 교사 숫자도 한 120%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을 넣으면 더 좋은 곳, 이런 곳을 잘 선정하시고 또 필요한 재정은 그에 걸맞게끔 배치해 주어서 너무 800개라고 하는 숫자, 양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저희는 이것을 여러 개, 교과교실제도 여러 개 타입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 4개 타입으로 나누어서 아주 많은 부분이 교과교실제에 운영되는 그런 경우 또는 수준별 교과 지원형처럼 그것이 많이는 안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교과교실제로 하게 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죽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임해규 의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곳에, 교육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의 방점을 거기에 찍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래서 교과교실제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실 개혁의 키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임해규 의원** 다음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도입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게 2006년부터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노무현 정부부터……

○**임해규 의원**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것을 반대했던 제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반대했다기보다 그 당시에 시범학교도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임해규 의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당시에 야당 의원이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꼭 추진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원 평가가 능력 개발 평가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능력 개발 평가를 인사에 연계할 것이냐…… 인사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원단체들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지난 정부 때 그리고 17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지금 교원 평가를 인사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교원 능력 평가를 대학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제도인지 그것을 제가 스스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의 경우에도 평가제를 실시할 때와,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대부분의 대학은 이 제도를 통해서 교수 능력이 그리고 교수 성실도가 엄청나게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역시 초중고에서도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교원단체도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렇지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교원의 인사에 연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는 결국 인사에도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학교수도 결국 마찬가지로인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냥 자기를 평가했다 하는 걸로서 지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환류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인사에 결부시키는 경우에 훨씬 더 교수들이 그것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었고, 그러한 현상은 초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해규 의원** 예,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교원 평가에 대한 법안을 내놓았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그간에 당론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이제 국민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교원 평가 실시를 원하고 있고, 교사들도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저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어서, 법적 뒷받침을 받고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슬기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사실 초중고 교사의 경우에는 그들의 신분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약간의 어떤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에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런데 이것이 무리하게, 인사 연계라는 말을 자꾸 무리하게 쓰다 보면 마치 인사상의 불이익을, 그런 불이익을 준다고 연결을 시킬 오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에 대해서 직무연수나 승진연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연수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는 굉장히 큰 형벌

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일단 도입하는 데 우리 정부가 좀 중심을, 신경을 쓰시고 중점을 두시고, 그래서 야당의 어떤 요구나 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귀를 기울여서 이 제도 빨리 시행되는 데 좀 초점을 둘 것을 촉구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다음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를 기르는 데 자녀를 기르는 데 요새 둘 낳고 셋 낳기가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유·초·중등학교를 다닐 때도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자녀가 둘 있을 경우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대학교 가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매월 돈을 내야 되는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런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외국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이 비싸냐 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계가 부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의원** 그런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학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역시 대학 재정에서 공적 부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감입니다.

○**임해규 의원**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등록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작년도를 비교하면 한 2배 정도로 학생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더 늘리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도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액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

라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는 이게 평균적으로 볼 때, 등록금의 한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장학금이나 세액 공제나 대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커버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사실 정부에서 2009년 고등교육 예산이 지금 4.6조 원이거든요. 4조 6000억 정도 되는데 2012년까지 5.1조, 5조 1000억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GDP의 1.1%, 다시 말하면 한 10조 가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5조 남짓 하고 있습니다. 즉 5조의 갭이 있습니다, 공부담에 관해서는.

물론 OECD의 많은 나라들이 고등교육도 국가 부담으로 그간 죽 해 오고 국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꼭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 재정에 대한 공부담,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은 턱없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도가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저는 등록금 얘기를 먼저 드렸고, 이제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 지원이 또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이 아주 빈약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또 제가 정부에 와 보니까 정부는 전체 예산 속에서 또 대학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에 대한 중요성, 그 교육의 중요성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균형 있게 하면서도 대학 재정을 많이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 시스템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또는 사립대학진흥법을 좀 만들어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게 교육계의 많은 의견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써 교육계에서 주장을 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이제 많이 내고 있는데 이 기부금의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 혜택을 주어 가지고 그것도 재원의 확대 방안의 일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의원 그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임해규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임해규 의원 제가 국무총리님께 하나 질문을 하고 다시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연계 등록금 대출제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공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부담을 높인다 하더라도 사실 등록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낮추기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도, 최근에 호주나 영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가 미래소득 연계 등록금 후불제도라는 제도인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좀 들어 봤습니다만, 그전에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임해규 의원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왜냐 그러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무장관이 해야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중요한 문제고 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외부 경제성, 소위 공공재적 특성을 인정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

대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이라든가 별도의 법 제정, 이런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이나 사립대학 진흥법을 일컫는데 이 문제, 특히 고등교육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원도 참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적자 재정으로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어 있는 때에 대학도 스스로 사회적 책무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금 조성 같은 것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학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는 제도로 설계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지금 주관으로 정책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6조 정도가 필요한데, 또 상환금을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보다 충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교과부에 태스크포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연계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을 위해서 사실 금융 관련된 부서나 경제 관련 부서나 조세 관련 부서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요. 물론입니다.

○임해규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ICL제도 도입 추진 전담반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떤가, 국무총리 산하에. 그 정도 되어서 합의가 되어야 이 제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서서히 교육계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학교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에 우리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임해규 의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갑 출신 민주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발 싸우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국회가 어려운 경제 현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해명하고 강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연차 사건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이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17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청와대와 정부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히 청와대와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청와대 행정관 성 상납 로비 사건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현 정부를 질타하고, 세종시의 건설 후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인권위 축소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정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청와대 행정관 성 상납 로비 사건, 크게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양승조 의원 성 상납 로비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불법 로비와 성 상납을 받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파렴치하고 부도덕합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경찰청장은 ‘성 상납, 걸린 것이 잘못’이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발언으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청와대의 지팡이’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행정관 성 상납 로비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김정수 행정관과 장훈 행정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 신상근 과장, 3인과 방송 업체 티브로드사가 얽힌 권력형 성 상납 로비 사건이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권력형 성 상납 사건도 중차대한 문제지만 사건에 관한 은폐·축소 의혹은 더욱 커다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마포경찰서는 피의자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성관계 중인 것을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채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CCTV와 컴퓨터에 입력된 투숙객 자료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수사를 자부하는 경찰이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우선 공직자들이 공직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경찰에게 여러 가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행해서 알아본 결과 CCTV가 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그 지역의 컴퓨터하고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 업체

만이 그것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복구 중인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양승조 의원 마포서는 3월 27일 범행 장소가 신촌에 있는 던힐 모텔이 아니라 서교동에 있는 폭스안마시술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경찰에서 밝힌 적은 없고, 어떤 언론사에서 밝혔는데 기자분의 혼돈임이 밝혀졌습니다.

○양승조 의원 아, 기자의 혼돈임이 밝혀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찰이 발표한 것을 언론에서 쓴 게 아니란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마포서는 4월 5일 술값을 지불한 티브로드의 법인카드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로비 관련 내용들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불과 이틀 뒤인 7일에는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사의 문기원 팀장이 대금 지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상전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의 누장수사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해서, 제가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구체적으로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수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을 질책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저번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경찰은 처음에는 신 과장과 문 팀장에게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여 최고 권력기관의 성 상납 로비 사건을 개인의 성매매 행위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려 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행정관 2명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의혹의 반증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의원님, 제가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

서 추구를 하면서 절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경찰이 수사하기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구체적이고 청탁 사실을 확인하기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 편의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일단 입건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 은폐·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부분은 제가 지시했습니다. 확실히 증거에 의해서 조기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저로서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모 인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기자들 접대 많이 해 봤다’ ‘기자들에게 모텔방 열쇠를 나눠 주며……’ ‘성매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경찰청장이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 저도 주의를 주었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공인으로서의 언행에 더욱 신중할 것을 몇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양승조 의원 성매매 단속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 강희락 경찰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경찰의 수장으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경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희락 경찰청장은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국회에서 충분히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의 이야기로는 본의가 표현상의 잘못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만큼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양승조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금방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양승조 의원 이번 청와대의 성 접대 로비사건, 청와대, 방통위, 티브로드사와 그 모회사인 태광그룹이 함께 만들어 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현재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단히 유감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만일 검찰에 이송되어 온다면 그 사건 자체와 동시에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지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이 사건과 관련되는 각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별도 수사팀을, 대규모 수사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지난 정부에서 양길승 사건이 얼마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공격을 했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어느 사건이요?

○양승조 의원 양길승 사건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양승조 의원 양길승 부속실장……

○법무부장관 김경한 아, 양길승 사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분당경찰서에서 진행 중이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장자연 리스트에 신문사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

었습니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지휘에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지금 검찰에서 무슨 이 사건에 관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사법 처리에 필요한, 사법 절차에 필요한 그런 것에 한하고 직접 그 사건 자체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끝나서 만에 하나 검찰로 송치된다면 그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언론사 대표든 누구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소문이 아주 무성하고 한데 또 그 실체는 별로 없는, 잘 밝혀지지 아니하는 아주 특이한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상이 곧 밝혀질 것이고, 또 만에 하나 검찰로 넘어온다면 검찰 역시 철저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현황이?

○**양승조 의원** 예, 현황. 현재 진행 정도를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한 20%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렇지요? 이미 1728만 평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3조 1734억 원이 지급됐고 분묘 1만 3000여 개 등 지장물 보상비 7809억 등 총 3조 945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이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을 들여

가며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상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충청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지 않고……

○**양승조 의원** 그렇지 않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특별법상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이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충청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지난 4월 6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행정도시,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종시는 행복도시가 아니라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총리님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로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이 그러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항상 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5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날짜로 한 410일 됐습니다. 1년이 넘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1년 1개월 됐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명박 정부 출범 410일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이 각각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꽤 많은 것으로…… 정부 제출 법안이 600건, 의원발의 법안이 36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제출 법안이 594건,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건이 2213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많은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7년 6월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2008년 9월 의원입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제출돼서 논의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차명진 의원과 임동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청인들이 분노하고 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 18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한 10개월 정도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에서 이루어 낸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법안조차 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강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의원입법으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아닙니다, 총리님. 의원입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법안제출권이 있고, 이것은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 해서 본 의원도 냈고, 심대평 의원도 내셨고, 노영민 의원도 내셨습니다.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이기에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변명도 안 됩니다.

총리님이 판단하셨을 때 왜 법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 지금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이것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논

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왜 이 부분은 나오시면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총리님답지 않게 그야말로 어물쩍하게 답변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게……

○**양승조 의원** 어떻게 야당 의원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전부 다 야당 의원이 내면 법안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까 600건 정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여당인 한나라당도 2000건 더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이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에 왜 법안조차 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진의가 뭐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건성으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사실 행정복합도시를 지금 자족기능을 보완해서 그것을 완결하면서 훌륭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양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아닙니다, 총리님.

자족기능은 일단 정부부처 이전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병행하면서 자족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님 자족기능을 말씀하시는데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요? 1년이 넘었는데 자족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작년 7월에 균형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균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다양한 유치활동과 더불어서 토지 저가공급이라든가 세금감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광역교통시설 조기완공이라든가 특목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 설치 등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그것은 전혀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부부처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예정대로 이전하면 충분히 자족기능이 됩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게 전혀 새로운 자족기능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든가 충청인들이 바라는 것은 원안대로 해달라, 원래 예정했던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원안대로 예정하고, 대통령께서 수차례 대선 공약사항이었고, 수차례 말씀하셨다시피 명품도시와 자족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교육기관도 고려대학이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지만 올 1월에 KAIST도 그쪽에 학교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양승조 의원** 그런 말씀하시는 것하고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전고시는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정부부처가 변경되면서 이전고시라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전고시 하는 것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 1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는 우선 이전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이전 방법이라든가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자족기능 보완방안 결과에 따라서 이전계획고시의 주요 내용인 이전 방법이나 시기,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는 자족기능 보완방안 결과가 나온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말씀하신 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게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부처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자족기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전부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맞물려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립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총리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의 대선공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권역별 정책공약집을 보시면 ‘행정복합도시 기능과 자족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이것은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약입니다.

이런 분명한 공약을 했고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대통령 말씀이십니다.

또 ‘자족기능을 강화한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하겠다, 누가 행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게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씀이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였고 공약을 세웠으면 우리 충청인 들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도하고 충분히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안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전고시조차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총리님,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양승조 의원** 계획에 변화 없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그러면 빨리 법안 제출하시고, 법안 제출보다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총리께서 협조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이전고시 4월에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행안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답변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양승조 의원 장관님, 왜 이전고시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총리님의 답변과 제가 지금 해야 할 이전고시 문제는 거의 캐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복합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법안은 이미 제출해서 심의 중이지만 이전고시 하는 것 자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저도……

○양승조 의원 그것 빨리 하십시오. 돈도 안 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러나 국토부의 검토하고 행복청의 검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방신문을 다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되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 의원 시절에 세종시 법안에 서명하신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세종시의 지위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제가 그 법안을 국회에 있을 때 같이 서명을 했는데 평소에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심대평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일람해 본 결과 제가 참여할 수 있겠다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 결과적으로 내용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서명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반대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양승조 의원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인권위 축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위 조직 21% 감축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다른 행정부처에서 이렇게 21% 정도 감축된 부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꼭 수치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된 뒤 한 번도 조직에 대한 진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많은 진단을 받으면서 축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총리실 같은 데는 엄청난 축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인원감축이 140명이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농수산부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에 대한 인원감축이 있는 적도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비율이 문제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비율도 뭐 그렇게, 16% 정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고 특히 인권위가 권익위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보호기관하고 중첩이 됩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지방의 근접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을 보강한 팀은 인원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2008년 10월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 기구 축소가 지난 촛불시위 때 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현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축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계 여러 인권기구에서 정말 걱정하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것 아시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데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 있고 실제 인권이 어느 정도 신장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가지고 매기는 A등급에는 우간다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콜롬보, 볼리비아, 이런 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기구라는 것은 기구의 크기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실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진

단을 해서 또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승조 의원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원상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법대 아시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양승조 의원 자율방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이분들이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만 365일 24시간 봉사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각 지자체장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또 그 방법대장의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는데 대장이 바뀔 때마다 차량 등록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 설치법을 내서 이분들에게 어떤 법인격을 주고 이분들의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동안 자율적으로 동네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자율방법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에 10만 이상의 자율방법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순찰비라든지 상해보험 가입비라든지 야식비를 지원합니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량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자율단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보호해 버리면 또 자율단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차량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의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자세한 건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 총리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죠.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설치목적, 의의를 잘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한승수 예.

○양승조 의원 2008년 1월부터 무료개방이 돼서 한 121만 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

민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서 그 독립기념관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독립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전철이 천안역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고 만약 이것을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면 독립기념관을 찾는 분들이 대폭 증가해서 독립기념관의 건설목적이 달성되고 또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경기 남부, 충남, 충북이 연결되는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양승조 의원 예, 들어가시죠.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연금 확대,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문제, 교통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양승조 의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밖으로는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질서 재편 움직임, 안으로는 경제·안보 위기에 이은 정치 도덕성의 위기로 국민들은 우려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회는 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해보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본회의장 의석의 절반 이상이 대정부질문기간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산회를 앞둔 지금 이 시간에는 끝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의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스스로의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 않나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스스로조차 외면하는 대정부질문을 언제 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포함해서 국회 운영의 효율과 생산성을 위해 국회 제도개선을 하루속히 서둘러야겠습니다.

비상한 시기를 맞아서 효율을 높이고 당론에서 자유롭고 대결과 파행이 없는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여와 야, 국회와 행정부, 의원과 의원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정부질문기간 신선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그동안 특권과 관행에 안주하면서 정작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노라고 국민 앞에 스스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 용기를 존경합니다. 너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라고 외치는 분이 있는 한 우리 국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개혁적 마인드가 하나 둘 모이게 되면 국회는 틀림없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서 대정부질문이 가능하도록 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국회의 희망이고 중심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용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이희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출석 의원(253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시 재석 의원(82인)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선동 김성순
 김성식 김소남 김영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장수 김재윤
 김춘진 김태원 김형오 나성린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보환
 박종희 박주선 배은희 백원우
 변재일 성윤환 신성범 심재철
 안홍준 우제창 원유철 이범래
 이성남 이시종 이영애 이용경
 이윤희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정현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양석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하균 정희수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한선교 허천 홍사덕
 홍희덕 황진하

○속개시 재석 의원(79인)

강성천 강승규 고흥길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조 김소남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남경필 문국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은수 박종희 배영식 서갑원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이두아
 이명규 이사철 이성남 이에주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종혁
 이한구 이화수 임두성 장윤석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양석
 정진섭 조윤선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허범도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황영철

○산회시 재석 의원(60인)

강명순 고흥길 김부겸 김성조
 김영선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충조 김태원 김형오
 김효재 문국현 문희상 박선숙
 박종희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성윤환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이강래
 이경재 이두아 이범래 이시종
 이에주 이윤희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정현 임두성 임태희
 임해규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하균
 정해걸 조배숙 주승용 주호영
 최경환 최규성 최영희 한선교
 허범도 허천 홍재형 황영철

○출장 의원(5인)

김효석 박영아 신지호 이재선
 진영

○청가 의원(19인)

김동철 김재균 송영길 신영수
 안형환 안효대 원희목 유정현
 이범관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종구 전여옥 정미경 조경태
 차명진 현경병 홍장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안병욱
 의사국장 이종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승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재희
 환경부장관 이만희
 노동부장관 이영도
 여성부장관 변도윤

○출석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 병 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 장 실
 방송통신위원장 최 시 중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주승용	국토해양	지식경제	민주당	2009. 4. 9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석현	신학용	민주당	2009. 4. 9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	김상희	민주당	2009. 4. 9
	이광재	김영록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

(2009. 4. 9 박상천 의원 외 82인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2009. 4. 9 조배숙·강창일·김효석·홍재형·유원일·김우남·송민순·강기갑·안상수·김동철·김충조·홍희덕·김종률·김상희·권영진 의원 발의)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9. 4. 9 김효석·백재현·김재균·백원우·박선숙·이미경·홍재형·최인기·유원일·신낙균·이성남·강봉균·양승조·오제세·김재윤·김종률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4. 9 김동철·김우남·최인기·문학진·이용섭·이광재·김재윤·김종률·홍재형·박은수·김재균·우제창·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2009. 4.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518번지 지1호 정옥기 외 1인으로부터 신상

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답변서 제출

의료 민영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9. 4. 3 정부 제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세종시 정부부처 이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2009. 4. 3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